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3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종교의 역할

The Role of American, Korean, and Japanese Relig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 DMZ to HIROSHIMA -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 29일(일)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일본 히로시마 세계평화기념성당

DATE

OCTOBER 25th(Wed) - 29(Sun)

VENUE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Hiroshima World Peace Memorial Cathedral



공동주관 • Co-hosted by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후원 • Sponsored by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경기도
GYEONGGI-DO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3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종교의 역할

The Role of American, Korean, and Japanese Relig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 DMZ to HIROSHIMA -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 29일(일)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일본 히로시마 세계평화기념성당

DATE

OCTOBER 25th(Wed) - 29(Sun)

VENUE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Hiroshima World Peace Memorial Cathedral



공동주관 • Co-hosted by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후원 • Sponsored by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경기도
GYEONGGI-DO

컨퍼런스 1 군비경쟁을 넘어 인류 상생의 길을 찾다 (사회 : 김성경 · 북한대학원대학교)

개회사	이기현 주교(의정부교구장) 7
축사 1	김동연(경기도지사) 8
축사 2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뇰(주한 교황청 대사대리) 9
축사 3	데이비드 말로이 주교(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11
축사 4	가쓰야 타이치 주교(일본 삿포로교구장) 13

제1세션 핵무기의 위협과 군비경쟁 (사회 : 백장현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제1발표	전쟁의 아수라장 :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핵전쟁 위협 · 이혜정(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18
제2발표	핵무기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가와사키 아키라(피스보트 공동대표,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 국제공동운영위원) 22
제3발표	핵군축으로 가는 길 : 핵군축 운동을 위한 관계 구축 · 존 웨스터 대주교(미국 산타페대교구장) 27
토론 1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33
토론 2	오카와 치히로(일본 가나가와대학교 법학부 교수) 36
토론 3	나가사와 유코(국립대만대학교 및 중앙연구원 대만 외교부 초청 방문학자) 40

제2세션 기후 위기와 한반도의 인권(평화) (사회 : 조효제 · 성공회대학교)

제1발표	북한의 기후 위기와 한반도 그린데탕트 · 추장민(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8
제2발표	탈핵과 에너지 전환 · 이상현(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 한신대교수) 65
제3발표	평화, 비핵화 및 인권을 위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경제제재 · 조지 로페즈(미국 노들담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명예교수) 78
토론 1	베른하르트 젤리거(한스사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 86
토론 2	제임스 히난(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91
토론 3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 94

종합 토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교회 (사회 : 홍용표 · 평화나눔연구소)

시라하마 미츠루 주교(일본 히로시마 교구장), 김주영 주교(한국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제라드 파워즈(가톨릭 피스빌딩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주드 랄 페르난도(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 오혜정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제니퍼 조이 텔퍼(피스 카탈리스트 인터내셔널) | 98

요약 2023 CKPF Summary | 101

언론 보도 가톨릭평화신문 외 | 107

참가자 명단 111

* 부록 2023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민족화해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 114

개회사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이곳에 설립한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가 벌써 일곱 번째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한국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워싱턴에서 미국 주교님들과 국회의사당을 거닐 때 ‘이제 첫걸음입니다.’라는 우정어린 격려를 보내 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국제대회를 시작한 2017년부터 미국과 일본의 주교회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연대해 주셨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주교님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깊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해되고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이 거대한 폭력은 악하고 비참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되는 전쟁과 적대적인 대결로 세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 경쟁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잔혹한 무기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살상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쟁의 폭력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폭력은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 인간에 관한 진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거짓이다. 폭력은 그것이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것들, 곧 인간의 존엄과 생명, 자유를 파괴한다.”고 가르칩니다.(『간주린 사회교리』 496항) 이제 인류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반포된 회칙 「지상의 평화」는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지상의 평화」 113항)라고 단언했습니다.

냉전의 대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제시하신 성 요한 23세 교황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는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된 평화를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의정부교구 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

축사 1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축사는 위 QR코드로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김동연

축사 2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9)

존경하는 주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에 초대해 주신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자 춘천교구장이신 김주영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포럼의 개최식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부터 민족화해위원회는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미국과 일본 주교회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구축과 화해를 향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조직,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전쟁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사실과 마주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황청은 한반도 정세와 밀접하게 동행해 왔으며,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의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여러 주교님과 신부님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와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민족화해위원회에 메시지를 보내 이번 미사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강북 메시지에서 “수많은 전쟁과 무력 충돌은, 공동체들 안에서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서 정의와 우호적인 협력을 수호하고 증진하려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극적으로 상기”시키신다고 회상하면서 “평화의 ‘예언자’가 되도록 모든 한국인을 격려”하셨습니다.

2014년 사도 순방으로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지역의 화해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10년 전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직자들과의 만남 첫 연설에서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화해와 안정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치하하며, 그러한 노력만이 지속적인 평화로 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라며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명동성당에서 집전하신 미사의 마지막 강론에서 교황님께서 한국의 평화 추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에 대한 믿음”이며, 이번 미사가 “첫째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이 한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평화의 예언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주신 화해의 은총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9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로마를 찾은 한국 천주교 순례자들을 환대하시면서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꿈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에게 맡겨드리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인간 원죄의 열매인 장벽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근원이자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선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솟아나게 하며 영감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원천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에 참여하신 여러 저명한 연사와 참가자들이 한국교회와 사회,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는 여러 분야의 격차를 메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의 공동 이해와 화해,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그 외아들과 함께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미래가 깃들고, 언젠가 우리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각자의 중요한 사명을 위해 그리고 이 단절된 한반도 가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뜻하고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한 교황청 대사대리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뇰

축사 3

존경하는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 김주영 시몬 주교님,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님, 시라하마 미츠루 알렉시오 주교님, 가쓰야 타이치 베르나르도 주교님,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신사 숙녀 여러분.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자리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 위원회의 여러 형제 주교님과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미국의 여러 주교님 그리고 리처드 페이츠 주교님과 손 맥나이트 주교님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아낌없는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 피우에서 저는 한반도 정세 기저에 깔린 긴장감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크게 늘리면서 한국 국민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일본 참가자 여러분 역시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여러 지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전사한 약 37,000명의 미군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을 합해 무려 5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전협정으로 끝난 미완성된 분쟁의 종식은 오늘날 존재하는 고뇌와 불확실성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는 신자들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이자 참으로 아름다운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 모여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항상 교회를 인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오랫동안 분쟁으로 고통받아온 이 지역에 평화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곳 ‘민족화해센터’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 저는 미국을 방문한 많은 한국 주교님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시 만났던 많은 주교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조직하신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과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했다는 주교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은 성직 생활 내내 한국 민족의 화해를 위해 일해 왔고, 이런 주교님의 노력을 통해 70년 전에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여러 다른 주교님들, 그리고 가톨릭교회 전체와 협력하여 탈북자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기울여 온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극화 세계,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출현 증가, 비대칭적 전쟁 및 관련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가 통치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새로운 복잡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 구축으로 향하는 길이 여전히 길고 힘든 여정임은 틀림없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역사는 그 여정의 우여곡절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는 긴장 고조, 군사화 요구 증가로 대변되는 이른바 “다운”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계가 목도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불과 몇 주 전에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절벽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일깨워줍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그러므로 대화, 만남, 차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도움이 절박한 이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관대함 그리고 모든 한국인이 형제자매이며 한 가족,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라고 강론하셨습니다.

2017년 교황님은 한국의 순례자들을 환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 붙이는 헌신 그리고 겸손과 인내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더욱 인간다워지는 미래, 전쟁을 거부하고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국가 사이의 더 큰 조화를 간절히 청하는 수많은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이 포럼을 시작하며,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둘째, 더 큰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셋째, 의지가 있는 파트너 없이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과연 누가 북한과의 관계 재개에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넷째,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한반도 평화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중대한 문제들과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는 이 긴 여정 동안 미국의 주교들 역시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언제나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말로이 주교

축사 4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3년간 우리들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 국제 정세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에 충격을 안겼으며, 군사적 역지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핵을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전제된 핵을 통한 억지론이 제기되어왔지만,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웃 국가인 벨라루시에 핵 배치를 추진하는데 이르며, 돌연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역시 동북아에 있어서 이 핵에 의한 위협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는 필요한 역지력을 갖추기 위해 군비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방위비를 1.6배로 증액하고 일본의 헌법 9조에 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대만의 유사 사태에 대비해 난세이 제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이곳을 군사기지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 군비를 통한 전쟁 억지론은 상대방에 대한 공포와 불신에 기초하고 있기에 현대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그 균형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의한 외교 노력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이는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반세기 전에 이미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113항) 최근 일본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 “비현실적인 이상론”, “꽃밭 이론”이라며 야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이것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주장한다.”(같은 책 113항)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이상과 괴리되어 있다고 해서 이상의 기준을 현실에 맞추려 계속해서 끌어내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깊은 죄악이 지배하는 비참한 곳이 되어버리겠지요. 우리들은 높은 이상을 내걸고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상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군비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하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강조해야만 하는 것은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정당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전쟁’을 보면, 이 전쟁은 방위 명목 하에 정당하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를 둘러싸고는 걸핏하면 누구에게 정당성이 있는지가 화두에 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무결한 시민입니다. 정당한 희생자 같은 게 존재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분쟁에서 어느 편에 정당성이 있냐 하는 관념적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이라크 전쟁 당시 일본의 한 유명 아나운서가 뉴스 방송에서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한 오폭도 테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본 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대중매체에서 그를 비난했고 주간지 등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군 관련 시설을 노린 ‘정당한 전투 행위’인 공중 폭격에 의한 오폭을 일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테러와 동일시하는 건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것이었죠.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의 말은 테러나 공중 폭격이라는 전투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관념적 논의가 아닌,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희생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불합리하게 목숨을 빼앗겼다는 점에선 테러나 공중폭격이나 다를 바 없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현실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으니 무력에 의한 해결 이외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아나운서는 이후 방송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그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본인들은 앞선 세계대전으로부터 전쟁이 초래하는 막대한 고통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두 측면에서 체험했습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의 일반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 의한 살육의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원폭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폭 투하에 대해 이것이 정당한 전투 행위인지, 일반 시민에 대한 범죄적 무차별 대량 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의 비참함과 고통을 전 국민이 공유했기에 그 원인인 전쟁 자체를 두 번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마음먹을 수 있었으며, 전쟁은 없다는 이념을 내세운 헌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계속해서 지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이러한 체험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희구와 전쟁은 없다는 맹세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지나, 이 비참한 체험에 대한 실감과 이에 대한 공감이 희박해지며 전쟁을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에 우려합니다. 전쟁의 현장에 있어 ‘올바른 전쟁’ 따위는 없습니다. 나아가 핵무기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무력 행위가 위법으로 여겨지는 날이 오기를 먼 훗날의 이상으로서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핵무기 폐기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본을 포함한 핵보유국이 핵무기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8월, 왼쪽의 날에 맞춰 미국에서 오신 두 분의 주교님, 시애틀대교구장 폴 에티엔 (Paul Etienne) 대주교님과 이번 포럼에 원격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산타페대교구장 존 웨스터(John C. Wester) 대주교님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셨습니다. 두 분이 속한 교구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배치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폐기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주교님과 함께 발표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파트너십’ 선언에 매우 동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많은 연대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바람을 실현하는데 공헌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본 삿포로교구장
가쓰야 타이치 주교

Session 1

2023

Catholic Korea Peace Forum

핵무기의 위협과 군비경쟁

전쟁의 아수라장 :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핵전쟁 위협

(이혜정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핵무기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 공동대표,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 국제공동운영위원)

핵군축으로 가는 길 : 핵군축운동을 위한 관계 구축

(존 웨스터 대주교 • 미국 산타페대교구장)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오카와 치히로 • 일본 가나가와대학교 법학부 교수

나가사와 유코 • 국립대만대학교 및 중앙연구원 대만 외교부 초청 방문학자

전쟁의 아수라장: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핵전쟁 위협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국전쟁(1950~1953)은 명백히 냉전을 세계화, 군사화, 제도화한 열전(hot war)이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 협정으로 끝이 났다. 냉전 시대 동안 한반도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미국, 소련, 중국, 일본 간 경쟁의 진원지였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분단된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를 넘은 군비경쟁과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황폐화를 자초한 북한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 매우 뒤틀린 방식의 핵무장 외교에 착수했다. 2018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잇단 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외교적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에 뜻을 모았다. 이는 한반도의 기존 분단-정전-동맹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평화 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의 군사주의 체제가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했다.

2019년 2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 혐의를 들어 6개월 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러시아에 통보했다. 1987년 체결된 INF 조약은 냉전 종식을 알리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상호확증파괴를 일컫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지니는 광기를 인식한 인간의 이성적 결단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타 공식적 합의 없이 회담을 마무리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 동결을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맞바꾸고자 했던 이른바 ‘스물 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은 모두 탈냉전 시대 종식과 평화로의 희망이 좌절되고 한반도와 전 세계가 핵군비 경쟁을 벌이게 된 새로운 시대의 시발점이었다. 북핵 위기는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 그리고 핵무장 정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는 미국이 영구적이고 범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외교 정상화와 평화 구축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었다.

탈냉전 시대의 평화에 대한 희망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는 두려움과 분노, 군사 우월주의와 일방주의를 결합한 절대적 안보를 주장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냉전 시대 핵역지의 기초였던 탄도탄우격미사일(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사실상 조약은 파기되었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고 '소극적 안보보장(NSA)' 요구가 거부되면서 북한은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라 불리는 새로운 핵무장에 착수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를 강력히 반대했다.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일방주의는 망상임이 드러났다. 부시 행정부가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대침체'와 겹치면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념적 기반이 약화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무런 승산이 없는 대이라크 전쟁 상황에 갇힌 미국은 제2차 북핵 위기 대처방안으로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형식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여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중국의 급부상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러시아의 수정주의 노선과 미국에 대한 불만은 급기야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사태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2019년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세계는 이전의 냉전, 탈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새로운 핵시대를 맞게 되었다. 냉전 시대 동안 핵역지 정책의 안정화는 미국과 소련의 핵 보유에 대한 전략적 동등성과 ABM 조약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은 미국과 소련 각국의 영향력 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와 미중 화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 그리고 중국이 보여준 미국의 단극주의에 대한 '전략적' 수용은 대체로 탈냉전 시대 세계 질서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INF 조약 탈퇴는 핵무장의 포괄적 현대화를 포함한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통해 미국이 러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는 새로운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제3차 핵시대의 불안정성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3자 핵경쟁은 본질적으로 양방향 핵경쟁보다 더 복잡하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더라도 중국에는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략적 취약성으로 인해 미국은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둘째, 현재 세 강대국 사이에서 냉전 시대에 이루어진 핵 관련 협력에 비견될 만한 전반적인 협력 혹은 결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은 2026년 만료되는 양국간 유일하게 남은 핵무기 조약인 뉴스타트 조약(New START Treaty)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은 해당 조약의 참여국이 아니며 미중 경쟁 또는 전략적 경쟁 상황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새로운 3자 핵군축 조약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셋째, 센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파괴적 기술이 핵 역지의 전통적 논리를 약화하고 있다. 일례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여 발사 직후 적의 핵무기를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술적인 '환상'이나 우려가 존재한다.

넷째, 제3차 핵시대에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과 같은 새로운 '지역적' 핵보유국이 등장한다. 국제사회와 기존 핵보유국이 이러한 권력을 수락할 것인가, 수락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조건에 따라 수락할 것인가와 같은 사안들은 전략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 새롭게 등장한 지역적 강대국들이 현재 다른 강대국들과 복잡한 지정학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제3차 핵시대의 또 다른 복잡한 특징이며 일례로 인도-파키스탄-중국으로 이루어진 삼자 게임을 들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는 제3차 핵시대의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안보 딜레마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 중 가장 취약한 국가로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포괄적인 핵무산 정책의 위협과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과 달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윤리적 장애물'이라 비판하면서 이에 덧붙여 북한의 다탄두 재돌입체(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기술과 같은 핵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핵 반격 능력 및 피해 제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기술적·전략적 동인이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핵역지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거부적 억제(미사일 발사 전후 방어)와 응징적 억제(예: 미사일 공격 후 적 지휘부와 지도층 궤멸)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3축체계' 전략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려 노력해왔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체계를 전략적, 전술적으로 다양화하고 2022년에는 핵무기 선제사용 성문화, 비상시 지도층 궤멸 대비책으로 지휘통제권을 위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동맹 정치는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의 핵역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초보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현재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율적으로 핵군비, '핵공유' 또는 적어도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현재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줄 방법은 전혀 없으며 핵역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2023년 7~8월 북한과 한미동맹 간 군사 대결에서 벌어진 상황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사례이다. 북한은 ICBM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확장억제 강화의 신호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Ship Submersible, Ballistic missile, Nuclear, '핵전략잠수함'으로도 칭함)을 배치했다. 이는 행동,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순환이자 '안보 딜레마'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한국의 자주적 핵무장 억제, 한일 협력관계 유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치러야 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가이며 유인책이기도 하다.

미국의 동맹 정치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규모 재무장 필요성이 불거졌으며 그 결과 2022년 말 일본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동맹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만 정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미일-한미로 이뤄진 준동맹은 중국과 북한의 결탁 아니면 적어도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군수 포함)을 꾸준히 요청받아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편 북한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실제로 북한은 전쟁 내내 러시아의 가장 일관되고 헌신적인 지지국 가운데 하나였다. 군수품이 절실히 필요한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군사적,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 과정의 일부로 2023년 9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 강력히 배척하는 두 적, 즉 '버림받은 자들(pariah, 러시아와 북한을 의미)'의 '이른바 정략결혼'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 국제공동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러한 형식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주최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일본에서 바라본 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는 질문에 대해, 저는 명확히 그렇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핵무기는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것은 인류를 말살시키는 절멸을 위한, 자살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의, 혹은 사람들의 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인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없애야만 한다’고 일본 사람들은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해서 호소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 분들이 계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8월 9일엔 나가사키에 각각 한 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해 말까지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지만,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사람 10명 중 1명은 한반도 출신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강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피폭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피폭자분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방사선의 영향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피폭 직후 대량의 방사선을 쬐고 급성 방사성 장애를 얻은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살아남으신, 현재 ‘피폭자’로 불리며 생존해 계신 분 중에는, 피폭 후 수십 년이나 지나 암 등의 병에 걸려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즉, 늘 몸 안에 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로 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피폭 2세, 3세에 대한 유전적 영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피폭자 중에는 가족이 젊어서부터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경우가 있으며, 본인의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 발의 원자폭탄이 한 마을을 괴멸시켰으며, 그 열선과 폭풍과 방사선이 정말로 비참한 파괴를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도 오늘날까지 피폭자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만 2000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7만 발 이상의 핵무기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줄어 1만 2000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1만 2000발 중 대부분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당시의 원자폭탄에 비해 수십 배, 경우에 따라선 백 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발할지, 우리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제대로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핵무기가 오늘날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침략을 지속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혹은, 중동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여기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핵 위기 혹은 핵미사일 개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이 정말로 사용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제대로 판단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가사키 대학이 많은 국제적 싱크탱크와 협력해 「동북아 핵무기 사용의 인도적 영향 - 핵 위험 감소에 있어서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동아시아에서 핵이 사용될 정도의 무력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비화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사람은 위협을 통해 학습했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1961년에 쿠바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쿠바 핵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당시 소련은 정말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쿠바 주위의 중남미 국가들은 두 번 다시 이러한 핵 위협은 사양하고 싶으면서 세계 최초로 비핵지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비핵지대, 이른바 틀라텔볼코 조약이며, 멕시코가 주도해 탄생했습니다.

이는 추후 전 세계로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비핵지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몽골은 동아시아에선 유일하게 비핵지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핵의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비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핵보유국도 그랬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계속해서 핵 경쟁을 펼쳐왔지만, 1985년 ‘핵전쟁에 승자는 없다. 결코 핵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미소 양국의 정

상,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두 대통령이 표명했습니다.

즉 핵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고 배치했던 국가들 스스로가 ‘이대로 가면 큰일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군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 후 1987년에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 조약이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핵무기 자체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미소 양국은 그 단계까지 가진 못했지만, 최소한 군축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차 세계전쟁 이후 40년 이상에 걸친 이른바 냉전 시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핵군축 경쟁을 지속했던 국가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다양한 군축 협의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다양한 군축 제도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파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법에 의한 군축을 제대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운동에도 역시 힘이 붙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국제법에 기반한 군축 관점에서선 NPT(핵 확산 금지 조약)가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조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NPT에서 정하고 있는 5개 핵보유국에서 충분히 핵 군축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이상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조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북한을 유일한 예외로 두고, 전 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러시아는 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철회한다는 의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도 비준을 안하지 않았냐’는 명목이었습니다. 분명 미국과 중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핵무기를 국가와 국가 간 파워 게임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핵이 사용되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피해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또 인간이나 사회나 환경에 미칠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CTBT가 탄생한 것도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핵실험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며, 이에 따라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식으로부터 이어진 1980년대 이후 운동의 성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세계 법정 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1996년의 권고 의견, 즉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은 일반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들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교섭을 실시하고 이를 완결시킬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내린 것입니다.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핵무기 금지 조약’입니다. 핵무기 자체를 전면 금지하

고 폐기로 가는 길을 정하지는 조약이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ICAN)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운동의 지지를 받아, 오스트리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국가에 의해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2017년 UN에서 채택되어 2021년 발효되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시점에서 97개국 이 조약에 서명을 했는지 혹은 이미 가맹국이 된 상태입니다. 즉, 전세계 국가 중 약 절반은 이미 이 조약에 가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런 조약에 가입을 한 것이죠.

이 조약의 기초에 있었던 것은 핵이 인도주의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핵무기가 초래할 괴멸적인 인도적 귀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핵무기를 국제 인도법 위반으로 간주한 이 조약에 전 세계 절반의 국가가 가입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진입니다. 이것이 10여 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몽골이 유일한 예외이며 다른 모든 국가는 이 조약으로부터 아직 등을 돌린 채입니다.

이것이 왜인가 하면, 아직도 ‘핵 억지론’이라는 논리가 이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 점점 그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NPT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비핵3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미국 핵무기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과거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본에도 냉전 시대 핵이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핵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분단되어 있다는 안보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한국의 시민 사회와 협력해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만들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조약에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방식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이루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북한은 당연히 국제법 하에서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기한 내에 폐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정책, 즉 미국이 한국과 미국 대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정책을 원조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법적 의무가 동반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를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추구하면서 이 지역의 시민 사회가 연합해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시민 그룹은 서로 협력하면서 일본 내 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27일부터 뉴욕 UN 본부에서 시작되는 핵무기 금지 조약 제 2회 당사

국 회의에 일본 정부가 참석할 것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곧바로 서명, 비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참관국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도 이와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이 핵무기 금지조약에 우선은 관여를 해나가고, 이러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의 길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8년 전 원폭 투하에 의해 이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 전 세계를 향해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인도주의적인 요청이기도 하다는 메시지를 많은 종교 지도자 여러분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이신 시민분들이 발신해주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군축으로 가는 길: 핵군축 운동을 위한 관계 구축

존 웨스터 대주교 (미국 산타페대교구장)

우선, 핵군축으로 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주교로서 맡은 바 책임이 산적해 있어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녹화본을 통해서라도 존경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핵군축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공동의 길이 생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돕기 위해 특별히 이 자리에 게시는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핵군축으로 향하는 저의 헌신적인 여정은 사목서한인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핵군축을 향한 대화』 집필에 큰 도움을 준 산타페 현지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서한을 읽으셨기를 바라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청합니다. 핵무기가 개발되고 만들어진 곳이 저의 대교구인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다는 사실은 제가 이 글을 반드시 써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조차도 비도덕적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핵무기 보유는 그 자체로 모두에 대한 위협임을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기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방사능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해를 끼칠 수 있고 치사율과 잔류효과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여성에서부터 어린이, 비전투원, 노인, 신생아, 환자에 이르기까지 인류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므로 매우 부도덕합니다. 저는 가톨릭교회가 비록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완전히 따르지는 못한다 해도 핵군축을 중대한 생명 보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핵무기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저의 사목서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술팀의 결속력 그리고 서한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적인 관계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입니다. 저 혼자서는 이 일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목서한의 한국어와 일

본어 번역 과정을 직접 감독해 주신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강주석 베드로 신부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강주석 신부님의 도움으로 제 사목서한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나가사키 명예대교구장 다카미 미츠아키 대주교님과 히로시마교구장 시라하마 미츠루 주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78주년을 맞아 떠난 일본 평화의 순례 기간에 나가사키대교구장 나카무라 미치아키 대주교님께서 순례에 동참해 주신 시애틀대교구장 폴 에티엔 대주교와 그 외 여러 직원에게 베풀어주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환대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산타페, 시애틀, 히로시마, 나가사키 4개 교구가 핵군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식 파트너십을 맺게 된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자폭탄 투하 78주년인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바티칸 시국이 최초로 서명하고 비준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명시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카미 명예 대주교님과 시라하마 주교님, 저는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과 우정,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항상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또한 저는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는 2025년 8월에 다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 핵군축을 향한 구체적이고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저는 감사하게도 핵폭탄 생존자 중에서 몇몇 피폭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시대의 문을 연 ‘트리니티(Trinity) 실험’으로 고통받은 ‘다운윈더스(downwinders, 방사능 낙진 구름이 이동하는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 세대를 위해 저의 대교구에서 치유 의식을 거행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약 40년 전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향해 “핵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핵전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원자의 힘이 방출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역사상 비할 데 없는 재앙을 향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인류의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우리 이제 지혜와 자비에 신앙과 과학을 결합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결단하며 핵군축을 위해 힘껏 나아갑시다.

그런데 핵군축을 위한 노력에 왜 관계가 중요한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는 어찌면 당연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중요하며 정치인은 숫자에 반응합니다. 핵무기 없는 미래 세계를 만들려면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핵군축 운동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역사적 사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동안 열렬한 냉전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에 레이건 대통령은 핵무기 폐지론자로 변했습니다. 이 전환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 냉전의 위험성에 항의하여 뉴욕시 센트럴 파크에서 벌인 시위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88년 핵무기 금지 조약 서명에 거의 도달할 뻔했지만, 스타워즈(Star Wars)로 널리 알려진 탄도미사일 방어 시설을 구축하려는 이른바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핵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의 몽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5년이 지나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후 지금 우리에게서 핵전쟁의 위협에 맞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 위협 그리고 소위 핵보유국의 대규모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후퇴만이 존재하는 슬픈 사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핵군축 노력을 위한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산타페, 시애틀, 히로시마, 나가사키 교구가 공식적으로 구축한 공식 파트너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 촉진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주교회의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이번 회의의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저는 3국의 다른 교구들 역시 동참하여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핵군축을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생명 보호 문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현재 UN은 총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저버 지위를 갖는 2개국 있습니다. 읍저버 지위국 중 한 국가가 바로 금지조약에 최초로 서명하고 비준한 바티칸시국입니다. 실제로 바티칸시국은 금지조약을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핵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진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의 실제 초안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UN의 193개 회원국 중 122개 국가가 2017년 7월 금지조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93개국이 금지조약에 서명했고 69개국이 비준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속속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국만 더 서명에 참여하면 모든 민족 국가의 대다수가 조약에 서명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장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를 불법화하는 진정한 국제 관계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가 이미 수십 년 동안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불법화 역시 국제적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의론자는 핵보유국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핵보유국들은 처음부터 금지조약에 반대해 왔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미국 대사와 영국, 프랑스의 외무 장관들은 UN 본부 바

로 밖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금지조약을 비난했습니다.

현재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UN 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 회견 당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핵비축량을 중대하고 대체할 수 없는 안보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핵야욕으로 인해 글로벌 군축 회담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 역설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외무장관 역시 현재 자국은 다른 국제무대와 여러 루트를 통해 핵확산 방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 번의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핵군축을 향한 그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제적인 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반세기도 훨씬 전에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위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절대 획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은 그 엄숙한 약속을 결코 존중하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이른바 확장 핵역지 정책하에 31개 나토(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단 한 국가도 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국민이 핵군축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향후 이루어질 금지조약 당사국 회의에 적어도 참관인 정도는 파견하도록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각각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선례로, 네덜란드 국민은 네덜란드 정부에 제1차 금지조약 당사국 회의를 참관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NATO 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형제자매들이 자국 정부에도 같은 요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이 되는 2025년 8월을 행동 개시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기 남한에서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걸음 물러나 이른바 역지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러시아와 미국은 그저 역지 자체에 필요한 몇백 개의 핵무기가 아닌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왜 모든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은 기존 핵무기를 완전히 다시 구축하고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내며 이를 운반할 새로운 미사일, 잠수함, 폭격기를 구매하는 소위 대규모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러시아, 중국, 미국은 이미 광범위한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왜 모두 시험장을 확장하는 걸까요?

대답은 이것이 단순한 역지가 아니라 문명의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역지와 핵전쟁 능력의 결합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저는 최근 사망한, 전직 핵전략가에서 유명한 내부고발자로 변신했던 대니얼 엘즈버그의 『인류 종말 기계: 어느 핵전쟁 입안자의 고백 The Domsday Machine: Confessions of a Nuclear War Planner』

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례로, 6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위협했을 때 핵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상세히 설명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핵위협이 실행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감사하게도 히로시마교구장 시라하마 미즈루 주교님과 나가사키대교구장 나카무라 미치아키 대주교님께서 저를 원자폭탄 기념관에 데려가 주셨고 기념관을 순례하며 저는 원자폭탄의 참혹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열핵무기의 완전한 파괴력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의 공포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를 통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이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점점 더 커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위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응에 주목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남한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또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 한국은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초 한미일과 결성한 ‘핵협의체’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어디서 끝날까요? 70여 년 전 여러분의 나라는 찢겨졌고 아직도 다시 합쳐지거나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적어도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바대로 군사적 적대 행위의 종식을 인정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평화협정이 어느 나라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와 화해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핵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지금의 상태보다 확실히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핵군축에 관해 진지한 글로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핵무기 경쟁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위협을 이제 더 이상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군비경쟁은 다양한 핵 행위자와 사이버 및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과거 냉전보다 훨씬 위험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핵군비 경쟁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영속적이며 모든 당사자의 끊임없이 불안정한 행동과 대응을 유발하는 악순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핵군비 경쟁의 심화가 아니라 핵군비 통제입니다.

더 나아가, 핵무기 폐기와 핵위협의 영구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와 지구를 아끼고 평화의 하느님과 인간의 양심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 대화를 시작하고 핵군축을 향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핵무기 보유의 부도덕성을 분명히 밝히셨으며, 교회는 과거의 ‘억지’에 대한 조건부 수용에서 영구 폐기라는 도덕적 명령으로 전환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계획으로 오히려 그들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 핵무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가 억지에 대한 조건부 지지에서 핵무기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극적인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포함해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주요 국제법적 수단을 지지하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셨듯이 저는 핵무기의 탄생지인 산타페대교구가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지하는 동시에 보편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핵군축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말에 저는 핵무기 금지조약 당사국의 두 번째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뉴욕시 UN 본부로 향할 예정입니다. 친애하는 가톨릭 교위 지도자들 역시 이 일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UN 교황대사와 함께 바티칸시국이 최초로 서명하고 비준한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커짐에 따라 대량 살상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금지하는 이전 조약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 보유국이 궁극적으로 금지조약을 준수하도록 더 강력히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피스빌딩(평화구축), 비폭력, 보편적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핵군축을 촉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요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군축 자체로 나아가 핵무기 생산과 보유를 중단하고 핵무기 없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죽음, 파괴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참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핵무기의 타는 듯한 혹독한 빛과 정반대입니다. 그 빛은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의 참된 빛이며 예수님의 평화의 빛은 우리에게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도구를 뛰어넘어 우리는 이 대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인류와 지구에 다가오는 위험한 위협에 걸맞은 긴급함으로 전 세계적인 핵군축이라는 대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함께 이 고귀한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핵 군축에 도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 평화의 빛 안에 머무는 여러분의 형제인,

산타페대교구장 존 웨스터 대주교

추천 도서: ‘사목서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핵군축을 향한 대화’ 존 웨스터 대주교, 2022년 1월,

<https://archdiosf.org/living-in-the-light-of-christs-peace>

같은 링크에서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번역본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남북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까 봐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들 역시 입을 모아 ‘유례없는 전쟁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좁디좁은 반도에서 전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에는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을 포함하여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군사훈련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022년 12월,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무인기가 DMZ를 넘어 남하했고, 남한군의 격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어 남한군 역시 무인기를 보내 북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전 70년인 올해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왔던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보 딜레마

더욱 위험한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상대방을 향한 ‘선제공격’ 전략을 공표하고,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선제 타격과 지도부 참수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연습하고, ‘확장억제’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투하도 가능한 미군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역시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지도부가 위협을 받는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핵무력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NPT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직후인 6월,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

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대체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양국의 메시지도 변화했습니다. ‘북미 합의 이행’, ‘항구적 평화 구축 달성’은 점차 사라지고,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바뀌었습니다.

한반도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억지력’이 커질수록 공격당할 위험과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최소한의 소통 채널마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 북미 대화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래 이토록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판이나 실수가 무력 충돌을 부르고, 핵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 예방이나 위기 관리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핵 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가 진행되는 4년 동안 유지했던 핵 실험·ICBM 시험 모라토리움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미국도 ‘북핵 위협’을 이유로 핵 전력을 활용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핵 기반의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점점 멀어지고 목표에서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해지는 것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점점 커져가는 핵무기의 존재감입니다.

평화 협력 대신 진영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는 갈수록 약화되고, 진영 대결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휴전선을 전선으로 하는 분쟁과 갈등의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바로 ‘평화 우선의 접근법’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 선 뒤 관련국들이 추구해 온 ‘힘에 의한 평화’는 실패했습니다. 불신을 키우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군비를 축소하고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모든 종류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목소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시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만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의 지지선언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사회의 평화행동에 응답하고 공명한 목소리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접경 지역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수도 서울시, 전라북도 등 전국 각지 지방의회에서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의원들과 지자체장 약 500명이 서명이 동참했습니다. 국회 의원들의 서명을 모으고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프란치스코 교황, 달라이 라마 등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향한 여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으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리마 보위, 시린 에바디, 타우왁쿨 카르만)과 수상 단체(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 ICAN, 핵전쟁 방지국제회의 IPPNW, 퍼그워시 회의) 대표들, 前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쿼타나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전 70년을 맞아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Global Action Month for Korea Peace (국내 17개 광역, 130개 시군구, 265개 행동 / 해외 12개국, 73개 도시, 151개 행동)>을 펼쳐 평화의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더불어 평화행진과 집회, 토론회와 심포지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활동, 온라인 액션과 각종 한/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문제를 환기하고, 적대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국에서,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였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와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해 온 여정이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는 현재 700여 개 국내 시민사회·종교 단체, 7대 종단, 8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가장 크고 넓은 전 세계 네트워크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고 신나게 울려 퍼지도록 하는 확장기이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전 70년의 한반도는 지금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평화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말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희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지혜를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현대 정치의 여러 과제와 핵 폐기, 그리고 시노드의 의의

오카와 치히로 (일본 가나가와대학교 법학부 교수)

우선 이번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를 컨퍼런스의 토론자로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현대 일본 정치 전공으로 국제 정치나 핵 폐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토론에서도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하나하나 매우 흥미 깊었으며, 많은 공부가 되었다. 한반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과 전 세계의 핵무기·핵 폐기를 둘러싼 현 상황과 과제, 가톨릭교회의 핵 폐기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이해정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오늘날 북한이 꾸준히 핵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하락하며 중국이 대두됨에 따른 핵 경쟁의 복잡화, 핵 비확산 체제의 동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 현 상황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이나 군사 블록화가 진전될 것이 우려된다. 핵 폐기는 상당히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 웨스터 대주교님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단순히 핵무기가 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핵전쟁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9월 말 UN 총회에서 연설하신 폴 갤러거 대주교님(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께서 “안타깝게도 핵전쟁의 위험도는 최근 수 세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¹⁾고 말씀하시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핵 폐기를 현실화하려면 웨스터 대주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핵보유국과 핵 억지 아래에 있는 주요국의 존재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핵 폐기보다 핵무기가 좀 더 목숨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인데, 이는 곧바로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핵무기 금지 조약은 어디까지나 이상론, 탁상공론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1) 일본 가톨릭신문(제4691호) 2023년 10월 15일

확실히 한국 국내에서는 가까운 ‘위협’의 증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대 억지에 대한 뿌리 깊은 의문이 존재하는 만큼 핵보유에 찬성하는 여론도 강력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은 한국 국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또한, 현재 한반도의 문맥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에는 어떤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지 하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편, 일본 정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 고자 한다.

우선 일본 여론은 핵무기 금지조약에 대해 긍정적이다. 2020년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가 조약 참여에 찬성했으며, 여당인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²⁾.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까지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를 보면 안보나 외교를 둘러싼 입장 차가 정치의 대립축을 규정하는 큰 요소로 기능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정치인의 우경화가 실증적으로 드러나고³⁾ 있는 반면, 유권자의 경우 여러 설이 있긴 해도 적어도 이들은 정치인만큼 우경화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단, 자위대나 미일 안보 체제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나 지지도는 압도적이다⁴⁾.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근 지역 안보환경의 긴장 등으로 인해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의견은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그러나 2023년 아사히 신문의 우편 여론 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역대 2번째로 높았던 반면,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이른바 비핵3원칙에 대한 지지, 안보에서 비군사적인 면을 중시하는 태도는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⁶⁾. 실제로 당파를 떠나 대부분의 정치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⁷⁾.

일본의 안보에 대해서는, 정권이나 정치인이 ‘힘에 의한 평화’ 쪽으로 더욱 이동하려 해도, 유권자는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계속해서 미일 동맹과 평화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자 하고 있다. 한편 핵무기의 경우, 정치인을 비롯해 적어도 일본 자체가 핵무기 취급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사히 신문 2020년 11월 17일

3) 이틀테면 다니구치 마사키 『현대 일본의 대의민주정치 - 유권자와 정치인』(이와나미 서점) 2020년, 나카키타 코지·오와다 유타 「자민당의 우경화와 그 논리」, 오쿠마 에이치·히구마 나오토 편 『일본은 우경화된 것인가』(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제 3부1, 2020년.

4) 내각부정부홍보실 「「자위대·방위 문제에 관한 여론 조사」의 개요」
<https://survey.gov-online.go.jp/r04/r04-bouei/gairyaku.pdf> (2023년 10월 12일 최종 열람).

5) 아사히 신문 2023년 5월 7일

6) 아사히 신문 2023년 5월 3일

7) 2021년 중의원선거 즈음 실시된 아사히 신문·도쿄 대학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 공동 조사에서 확인된 각 당 후보자의 비핵3원칙 견지에 대한 스탠스가 평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아사히 신문 웹사이트 <https://digital.asahi.com/senkyo/shuinsen/2021/asahitodai/>(2023년 10월 12일 최종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핵무기 문제를 보면,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게 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아픈 기억이 점점 열어지고 있는 것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핵 폐기 가능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의 기저에 존재하는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는 결코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모처럼 올해 G7 정상회담이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핵무기 금지조약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라는 점에서는 이 선생님께서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셨던 점도 인상 깊었다. 여기에 안보의 딜레마를 회피하며 긴장 완화로 향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국내 정치·정당 정치 분석 전문가로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잠시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당 정치에 대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권이 북한에 엄중한 자세를 취하는지, 융화적인지는 다른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외교 안보 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전 정권의 대 북한 융화 정책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보면 명백할 것이다.

앞으로의 긴장 완화, 한반도에서의 핵 폐기 움직임을 생각할 때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친 프로세스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적 양극화나 정권 교체 리스크를 넘어서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레젠테이션 중 핵 폐기는 Pro-Life의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납득이 됐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Pro-Life인지 아닌지마저 정치적 쟁점으로서 분단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평화를 정치화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 누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양극화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세계 각국 공통의 과제이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나아가서는 기능 부전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퍼포먼스나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대응의 장단점도 있다 보니 민주주의의 후퇴나 전제주의가 우위에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제주의에는 교제의 자유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민주주의에는 친교 활성화를 위해 불가결한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까지 개최되는 가톨릭교회의 제16회 시노드 정기총회의 주제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사명, 참여’라는 점은 교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대 정치사회에 있어서도 실로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웨스터 주교님도 소개하신 일본과 미국의 주교 4분이 참여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은 이번 시노드의 정신을 체현함과 동시에 핵 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시는 활동으로서, 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동참하는 교구가 일본과 미국을 넘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1)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보편적인 말씀이다. 이번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이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평화에 대해 말씀하시며 복음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립을 인내하고 이를 해결해, 새롭게 이어진 길로, 이를 변모시킬 시도(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징표』 89항)”라고 말씀하신다.

가톨릭교회와 이곳에 속한 우리들은 현실 정치의 모순, 암초를 받아들이면서 평화마저도 정치화하고자 하는 유혹을 참아내며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시선에서 배우고, 시대의 증거를 구별하면서 최종적으로 핵 폐기를 받아들이는데 이른 것처럼 현대 세계와 사회가 핵 폐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걸어나가야만 한다.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⁸⁾.

맺으며, 오늘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 보면서, 핵무기 없는 평화가 한반도에 한시라도 빠르게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나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8)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사목방문 주제였다.

핵무기 폐기, 핵군축 후퇴에 대한 한미일 정부 그리고 가톨릭의 과제와 역할

-INF조약, 뉴스타트 조약의 한계, 적기지 공격능력과 전수방위 전략,
원폭 투하80주년 제언

나가사와 유코 (국립대만대학교 및 중앙연구원 대만 외교부 초청 방문학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프라하 연설(2009년 4월) 이후 약 15년이 흘렀다. 그러나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핵군축, 비확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상황은 악화되었다. 필자는 국제정치학, 동아시아와 미국의 외교사, 특히 한반도 정세와 평화 구축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국제조약의 한계 그리고 전쟁과 식민통치 배상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 한일 싱크탱크 공개회의, 비공개회의와 북한 방문을 통해 동아시아의 방위 정책과 전후 한일, 북일 배상 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당해왔다. 특히 남북 평화체제, 한일과 북일 국교 정상화, 원자력 평화이용 조약을 둘러싼 한미일의 갈등 그리고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의 전후 보상과 약탈문화재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번 국제회의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나 시민 활동 등의 모든 발표에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주석 신부님을 비롯해 주최 측,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이혜정 교수님(중앙대)이 ‘전쟁의 아수라장: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핵전쟁 위협’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2월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①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INF Treaty) 탈퇴, ②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스몰딜’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핵군축으로부터 크게 후퇴해 각국이 군비 경쟁으로 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INF조약은 핵군축 조약의 상징적 존재이자 냉전 종식을 이끌어낸 미국과 소련의 약속이었다. 이 조약은 냉전 말기인 1987년 핵무기 폐기의 이상(理想)을 강조했던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싸워서 안 된다’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서명한 합의였다. 이 합의로 현지 사찰을 포함해 엄격한 검증 조치가

수반되는 핵전력 감축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무화되었다. INF조약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 일부 미사일 폐기를 약속했다는 점 외에도, 1)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에 계승된 점, 2) 조약 명칭이 ‘중거리 핵전력’이기는 하나 사거리 500~5,500km 중거리 미사일 외에 재래식 무기 폭발을 탑재한 미사일도 금지했다는 점, 2) 실제로 두 나라가 총 2,692기를 폐기했다는 점은 조약 체결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혜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INF조약을 탈퇴한 이유는 미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70기 외에도 INF조약의 폐기 대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사정거리 3,000~5,500km)을 16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사정거리 1,000~3,000km)을 80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MRBM은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며 IRBM은 괌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전역이 공격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필자는 이혜정 교수님이 강조한 동맹관계를 미사일에 적용시켜 생각해 보았다. 중국의 INF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사정권 내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괌 등 주요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군비경쟁은 작금의 일본 방위비와 한국 군사비 증강에 나타난다. 이혜정 교수님이 2022년도 일본 방위비 예산의 급격한 증가폭을 지적해 주셔서 2023년도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23년도는 22년도 대비 26%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23년도 예산을 ‘방위력 발본적 강화 원년 예산’이라 명명하고 향후 5년간 방위력 정비 수준을 현재 계획의 1.6배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2,113억 엔은 상대국의 미사일 공격 발사거점을 사정권 밖에서 공격하는 ‘반격능력’에 활용 가능한 ‘스탠드 오프 미사일’인 미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배치에 할당되었다. 또한 이번 달 초 일본 정부는 26년, 27년도에 최신형 토마호크 ‘블록5’를 최대 400발 도입하는 계획을 앞당겨 25년에 우선적으로 종전 모델인 ‘블록4’ 200발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을 피하는 중국과 핵, 미사일 개발을 반복하는 북한, 그리고 양안 문제 등을 이유로 ‘억지력’ 향상을 위해 ‘적기지 반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2009년 자민당 정권의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아소 정권하에서 내각 관방부장관보를 맡아 안보정책을 담당한 방위청 관료 야나기사와 교지(柳沢協二)와 여러 국제정치학자는 ‘적기지 반격능력’이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급증을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반격능력은 오히려 일본을 공격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며 적기지 공격은 양측의 끝없는 발사 공격을 유발할 것이다. 2) 중국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사일 반격능력 증가가 억지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3) 기시다 정권은 반격능력 보유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전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며 그 중 약 60%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에 향하고 있는 일본 열도의 해안선에 설치되어 있어

위험이 크다. 원자력발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자력 발전소 공격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4) 일본국 헌법에 입각한 ‘전수방위’는 일본이 공격 능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고도의 방위전략이다. 일본이 상대국 본토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이 되지 않겠다고 알리는 전략은 상대국에 일본을 공격할 구실을 주지 않는 방위 전략이다. 따라서 반격 능력 보유는 이 전략의 전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일본은 일본 가톨릭교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일본국 헌법 9조 ‘피스 나인’의 정신을 길러왔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추구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는 일본국 헌법 9조이며 전쟁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전후 일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는 일본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정치학자인 엔도 겐(遠藤乾) 도쿄대 교수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국방비 증가에 관련한 정치가 발언으로 일본의 재군비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방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혜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대립도 군축의 후퇴의 한 원인이다. 2023년 2월 러시아는 두 나라 사이의 유일한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 뉴스타트 조약)의 의무 이행 중단을 표명했고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전략핵무기 정보 제공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시험에 관한 사전 통보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강국인 만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략 핵무기의 투명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의 참여국이 아닌 중국과 미국의 경쟁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혜정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미중러 3개국 이 핵군축으로 향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ICBM발사와 미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배치, 북한의 공격을 상정한 한미일의 합동 군사 훈련 등 다양한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는 동맹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혜정 교수님의 견해에 찬성한다. 냉전 체제의 동맹 간 대립이 반복되면서 핵, 미사일은 이미 억제 수단이 아닌, 전쟁과 공격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군 관계자들만의 이론적 작전과 전략에 머무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국제적인 분쟁 상황이 언제든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핵군축이 후퇴하고 있기는 하나, 존 웨스터 대주교님의 ‘핵군축으로 가는 길’ 발표 내용을 통해 가톨릭교회가 핵무기 폐기활동의 최전선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다. 2019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존 교황들이 용인해왔던 ‘핵역지론’을 명확히 부정하고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말씀하신 점과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나라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웨스터 대주교님께서는 ‘보편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군축을 위해 노력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시고 나아가 올해 8월 시애틀대교구의 폴 에티엔 대주교님과 함께 히로시마 세계평화기념성당에 방문해 히로시마교구가 주최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핵무기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평화 집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셨다. 핵무기 폐기를 염원하는 대주교님의 기념 강연은 일본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반응 아래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대주교님 활동의 원점을 조사해보았다. 뉴멕시코주는 1945년 7월 16일 미 트루먼 정권이 비밀리에 ‘트리니티 핵실험’을 실시한 곳이다. 당시 핵실험장인 ‘트리니티 사이트’는 도쿄 도 크기의 3.7배에 달하며 지금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최대 10배의 방사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이 4대에 걸쳐 암에 걸리는 등 건강 피해가 속출하자, 환자 중 한 명이 2005년 설립한 ‘툴라로사 분지 다운와인더 컨소시엄 (Tularosa Basin Downwinders Consortium : TBDC)’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미 정부와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주교님은 핵 보유 자체가 ‘비도덕적(immoral)’이기에 핵군축이 ‘생명중시(pro-life)’의 대원칙에 서야 하며 핵무기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살상력을 대극적인 위협이라 비판하셨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권과 도덕 문제 또한 별도 세션에서 다뤄질 예정이니만큼, 대주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 폐기 문제도 인간의 생명과 권리,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대주교님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우리의 연대를 촉구하는 것과 같이 과학과 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한쪽만 존재한다면 불완전하고 맹목이며 위험하고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도 다른 누군가와 연대해야 한다. 대주교님은 서두에서 핵군축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의 길’이라고 지적하셨다. 또한 대주교님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촉진을 위한 산타페, 시애틀, 히로시마, 나가사키 교구의 정식 파트너십을 ‘동북아시아 평화 촉진을 위한 미국, 한국, 일본 주교회의의 연대’라 칭하고 이 파트너십의 확대를 제안하셨다.

여기서 필자는 중화민국(대만)의 ‘중국지역 주교협의회(Chinese Regional Bishops’ Conference)’ 등의 지역에게까지 ‘평화 촉진을 위한 동북아시아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티칸 시국은 대만이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UN에 가입한 결과 대만은 UN의 대표권을 중국에 빼앗겨 UN회원국으로 승인받지 못한 채 자신들을 ‘국제사회의 고아’라 부르고 있다. 중국을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만은 핵군축을 위한 조약에도 ‘국가’ 자격으로 협정을 맺을 수 없다. 또한 대만이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13개국에 불과해 바티칸 시국, 아이티, 과테말라 등 가톨릭 신도가 많은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민주진보당)이 취임하며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고 입법원은 2017년 1월 ‘비핵가원(원자력 발전이 없는 고향)’을 2025년까지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 가결했지만 2018년 11월 공민투표에서 ‘2025년까지’라는 기한은 조문에서 삭제되었다. 다만 대만 내 탈원전 운동이 고조되면서 건설 중이었던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변국 시민과 연대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동, 에너지 정책 전환을 주변국에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교회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연구회나 평화 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별도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연구회와 평화순례 실시 경험이 있는 박현동 아빠스님, 미즈노부 이치로 신부님도 등단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종합 토론에서 그간의 사례나 성과, 그리고 대만 등 다른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대주교님의 또 한 가지 제안은 원폭 투하 80주년인 2025년까지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TPNW) 불참국인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 한국, 호주가 당사국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급박한 전쟁 상황은 해당 국가뿐만이 아닌, 국제적 안보 정책으로서의 핵 사용 위협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미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사회 구조가 핵보유를 전제로 전개되고 있으며 핵 보유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의 핵 보유국과 한국, 일본 등 핵억지를 이용한 안보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핵군축, 핵무기 폐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가톨릭과 여러 종교, 연구자 등 각계 각층이 모여 국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활동해야 한다. 핵군축은 교황 개인 혹은 바티칸 한 국가, 그리고 가톨릭만이 목소리를 높여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대주교님이 강조하신 ‘관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3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The 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 : FABC)는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아시아 대륙회의의 최종문서’(시노달리타스: 그리스어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 나가는 방식’,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함)에서 아시아는 지리적, 인구적으로도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대륙임에도 기독교는 소수(가톨릭은 아시아 인구의 약3.31%, 일본은 0.3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교회 활동에 여성 참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가교’로서의 교회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교회가 외부로 향하는 다리를 놓고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시아 시노달리타스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필자는 대주교님의 제안을 접하고 ‘공동의 집’으로서의 세계를 생각하고 ‘관계성’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 일본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라 6,2)는 성경 말씀이 나온다. 일본이 주변국과 연대하는 ‘관계성’을 심화하는 데에 있어 일본 식민 통치를 둘러싼 역사와 역사 인식의 차이 그리고 전후 배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등 여성의 성 문제는 교회에서도 다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제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미국과 일본도 문제를 떠안고 있다. 양국은 태평양전쟁의 교전국으로 미국은 1953년 UN 총회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연설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계기로 원자력 이용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으며 일본은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일본은 1957년에 미일 정부 관계자의 원자력 홍보 전략 아래 히로시마시 원폭자료관에서 원자력 평화이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이미지 전환을 위해 앞장섰다. 올해 8월에는 나가사키시가 2025년 원폭 투하 8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전시 관련 심의회 위원(20명, 임기 2년) 중 2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과정에서 원폭 피해자 2세인 시민단체 ‘재외 피폭자 지원 연합회’의 공동대표가 낙선했다. 낙선 이유는 ‘일본의 가해 사실을 전시하지 않으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반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 보도되었다. 일본은 일본의 반핵, 평화 운동, 원자력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7만 명의 원폭 피해자 와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간과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인 1966년 한국의 피해자 지원 단체가 한국 정부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드러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방일 치료는 1970년대 초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일본은 19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설립과 동시에 실질적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지명이사국 13개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한국, 바티칸도 1957년부터 IAEA에 가입했다. 바티칸은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고 있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인 원자력발전에는 반대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의 당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폭 문제로 인해 두려워했던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는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이라는 ‘낙관주의 미풍’을 의식하게 되면서 원자력을 둘러싼 국제적 관계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전 세계의 국회, 정부가 주도해 과학자, 전문가 지원과 원자력 이용, 활용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2021년 9월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임기 1년) 올해 9월에는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이 IAEA원자력에너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편

IAEA 분담금 부담 비율을 보면 일본은 미국(25.101%), 중국(14.505%)의 뒤를 잇는 3위(7.758%)이며 한국은 9위(2.476%)이다. 이에 올해 7월 IAEA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하자 그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IAEA의 일본 편향적인 ‘해양 방류’ 안전 평가는 러시아나 중국 등으로부터 ‘오염수 해양 방출’,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강화’, ‘일본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이로 인한 여파는 일본과 주변국들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여,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에 일본에 대한 여론이 대립해 사회 분단이 초래되는 등 지역 간 연대는커녕 지역 내, 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 역시도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필자가 지도를 받아온 교수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핵개발을 장려한 인물이고 연구실 선배들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문제와 북한 핵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해 사회에 알리기도 했으나 학회에서는 소수파에 속했다. 필자는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과 국제사회의 방치, 미국을 필두로 한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원자력 정책을 연구해 왔지만, 전문가들의 학회 발표라는 안정적인 곳에서 한미일이 각각 짊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역사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사회에 공포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그동안 침묵해왔다.

대주교님께서는 ‘트리니티 사이트’를 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인류 첫 핵무기 실험 ‘성공’의 땅이자 과학의 눈부신 역사를 보여주는 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피해자들과 함께 핵무기 폐기라는 험난한 여정을 선택하셨다. 이러한 대주교님의 용기 있는 결단과 그간의 활동에 큰 경외심과 존경심을 느끼고 있다. 일개 시민에 불과한 필자는 일본 정부를 움직일 힘이 없다. 다만 과거 전쟁과 민족 간 분쟁, 일본 내 독재 정치 등 가해와 가담의 역사를 배우고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 노력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활동의 구성원이 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피폭 일본’에 그치지 않고 전쟁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전후 배상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 원자력 발전이 가진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다른 국적 혹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역사를 배우며 핵군축, 핵무기 폐기 실현을 위해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일 것이다.

Session 2

2023

Catholic Korea Peace Forum

기후 위기와 한반도의 인권(평화)

북한의 기후 위기와 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장민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이상헌 •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 • 한신대학교수)

평화, 비핵화 및 인권을 위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경제제재

(조지 로페즈 • 미국 노틀담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명예교수)

베른하르트 젤리거 •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

제임스 히난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박현동 블라시오 아바스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

북한의 기후 위기와 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록(Abstract)

북한은 기후 변화로 인해 높은 기후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취약성이 높다.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인명피해가 가장 크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손실 위험도 높다.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고 노출 인구가 가장 많으며 가뭄에 따른 식량 감소로 인한 건강과 인명피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자연재해 빈발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 빈발, 하천 관리 미비, 재해 예방 시스템 부재, 산림 및 토양 황폐화,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토지 및 수자원 이용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호우 일수 등 극한 기후 현상의 증가 등 한반도 전체의 기후 변화 장기 전망에서 북한 지역의 기후 변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특히 북한 산악지역의 급속한 온난화는 고산지역의 생태계 취약성과 동계 적설량 감소 등에 따른 수자원 관리 체계의 취약성 초래할 것이다. 기후 변화 자연재해 빈발, 토양유실과 산림생태계 파괴는 곡물 생산 감소, 인프라 붕괴 등 사회경제적 피해로 악순환되고, 생물다양성 서식지 감소로 야생동물 이동과 전염병 전파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상류 북한 지역의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및 빈발은 남한 하류지역 홍수 피해, 수자원 고갈,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농업/어업, 수력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하여 한반도 전체의 기후 변화 취약성 악화 및 적응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기후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안보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기후 위기로 초래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하여 전통적인 대북 안보/통일 정책의 하위정치로서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과도하게 소위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를 추구한 기존의 ‘그린데탕트’ 방안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전환적 접근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독립변수이자 핵심 요소로서 북한 기후 위기 이슈의 위상을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발 기후 위기 안보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국제적으로는 안보 위협을 경감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관점과 내용의 ‘한반도 그린데탕트’ 방안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기후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한민족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보하는 미래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기후위기와 한반도 그린데탕트

2023. 10. 26

추 장 민 (sinoeco@kei.re.kr)



목 차

- I. 북한 기후위기 진단과 전망
- II. 북한 기후위기와 한반도 안보위협
- III. 북한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그린데탕트

I. 북한 기후위기 진단과 전망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실태

북한의 기후변화 경향

-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30년간 1.4°C 상승(0.45°C/10년 추세)하여 남한의 1.1°C 상승(0.36°C/10년) 경향보다 온도상승 현상이 뚜렷하며, 평안남도 내륙, 원산을 중심으로 함경도 해안지역에서 크게 나타남
- 동기간 북한의 강수량은 약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감소 지역과 증가 지역 혼재

최근 30년간(1981-2010년) 한반도 전체, 남한, 북한의 연평균과 계절평균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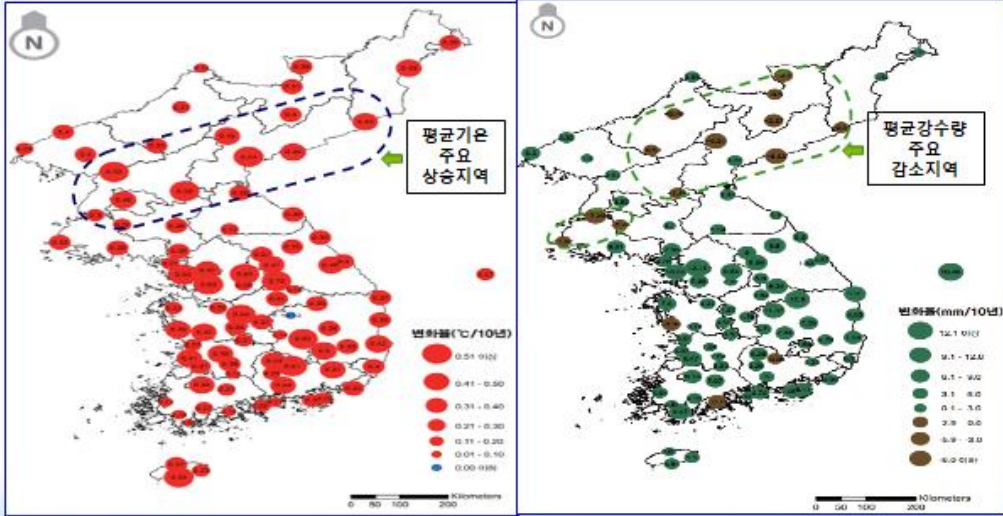
구분		연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기온	한반도	0.41**	0.25	0.24	0.49**	0.56*
	남한	0.36**	0.23	0.11	0.43**	0.57*
	북한	0.45**	0.28	0.39	0.52**	0.47
강수량	한반도	25.87	10.34	28.07	-7.70	2.20
	남한	54.28	16.95	46.26	-11.85	1.99
	북한	-25.19	-3.20	-5.54	-3.24	-1.40

주: 기온 단위(°C/10년) 강수량 단위(mm/10년)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9%)
 자료: 기상청(2012),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p. 64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실태

북한의 기후변화 경향

한반도 평균기온 및 평균강수량 변화를 공간분포



주: 기온 단위(°C/10년)
 자료: 기상청(2012),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pp. 66-67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실태

자연재해 실태

기후변화 자연재해 빈발, 거의 매년 홍수와 가뭄 피해 발생

- 2020년 북한 강원도, 황해남북도 등 지역에서 김정은 집권이후 가장 심각한 홍수피해 발생
 - 국제적십자연맹에서 사망 22명, 실종 4명 발표, ACAPS(비정부기구) 135명 사망 집계
- 2021년 함경도 폭우로 수재민 1,350명 발생, 농경지 4천ha 침수 피해

2021년 북한의 홍수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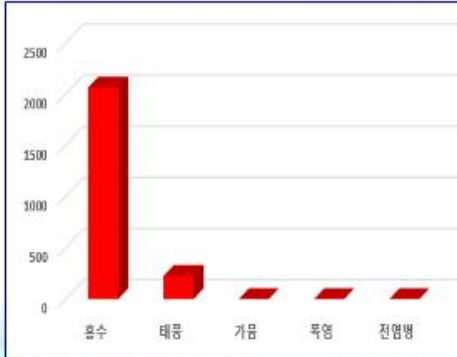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2021.8.9), "북한, 4년여 이어 올해도 또 홍수...봄에 잠긴 농경지", <https://www.yonhap.co.kr/view/PY1403210825266300042>, 검색일: 2021.10.14; MBC 뉴스(2021.08.20), "유엔 '북한 수해로 수재민 1,350명 발생...4천 ha 농경지 피해'", https://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4676_34866.html, 검색일: 2021.10.14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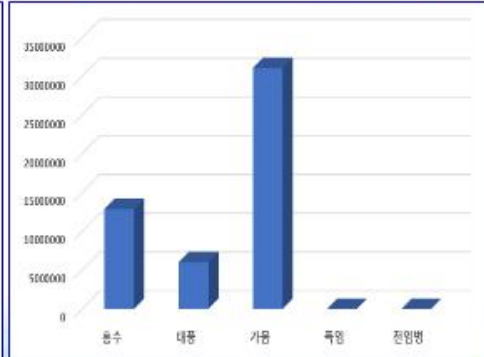
자연재해 유형별 실태(1991-2023)

- 지난 30여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하여 2,390명 사망, 5천만 명 이상 피해를 받음
- 가뭄으로 인하여 약 3천1백만 명 이상, 홍수로 인하여 1천3백만 명 가까이 피해를 받음
- 북한은 현재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2억6천2백5십만 US\$(북한 GDP의 1.8%)의 경제적 손실 발생 추정 (UNESCAP|2023, "DPR Korea Disaster Risk", <https://np.unescap.org/country-profile/PRK#paragraph-id--26753>(검색일:2023.09.27))

자연재해 사망자 수(1991-2023.09.24)



자연재해 피해자 수(1991-2023.09.24)



자료: UN-DAT(2023.09.24), CED / UCLA와, Brussels, Belgium, <https://www.unrict.net/>(검색일:2023.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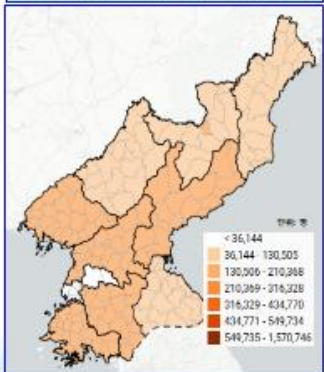
6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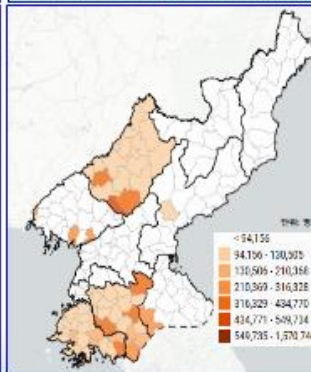
자연재해 피해지역 공간 분포(1970-2021)

- 가뭄 주요 피해지역: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등
- 홍수 주요 피해지역: 황해남북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
- 홍수로 인한 사망자 주요 발생지역: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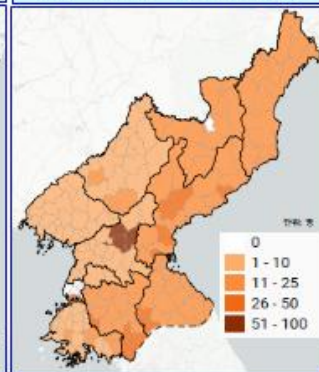
가뭄 주요 피해지역 공간분포



홍수 주요 피해지역 공간분포



홍수 사망자 발생 공간분포



자료: ESCAP Risk and Resilience Portal: An Initiative of the Asia-Pacific Disaster Resilience Network(2021), "DPR Korea Drought/Floods: Past disaster(SD-DAT)(1970-2021), Total number of people affected/Total death", <https://np.unescap.org/regional-app/#filter> (검색일:2023.09.2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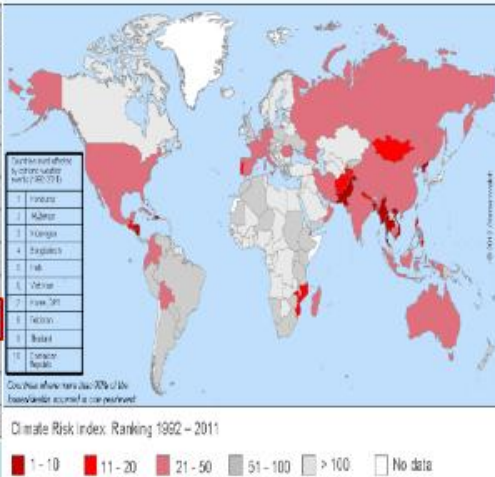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실태

장기 기후위험지수 상위 7위

장기 기후위험지수 상위 10개 국가(1991-2010)

CRI 1992-2011 (1991-2010)	Country	CRI score	Death toll	Deaths per 100,000 inhabitants	Total losses in million US\$ PPP	Losses per unit GDP in %	Number of Events (total 1992-2011)
1 (3)	Honduras	10.83	329.25	4.96	679	2.84	60
2 (2)	Myanmar	11.00	7,137.25	13.79	640	1.41	37
3 (4)	Nicaragua	18.50	160.0	2.82	223	1.89	44
4 (1)	Bangladesh	20.83	824.4	0.68	1,721	1.18	247
5 (5)	Haiti	21.17	301.1	3.43	148	1.08	54
6 (8)	Viet Nam	23.67	433.15	0.65	1,741	1.06	214
7 (9)	Korea, DPR	26.00	76.65	0.33	3,188	7.64	37
8 (5)	Pakistan	30.50	545.9	0.38	2,183	0.73	141
9 (55)	Thailand	31.17	160.4	0.26	5,413	1.38	182
10 (7)	Dominican Republic	31.33	211.6	2.47	185	0.35	49

글로벌 기후위험지수 세계 지도(1992-2011)



자료: Sven Hammeling and David Schelen(2012),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GERMANWATCH, p.6, p.11,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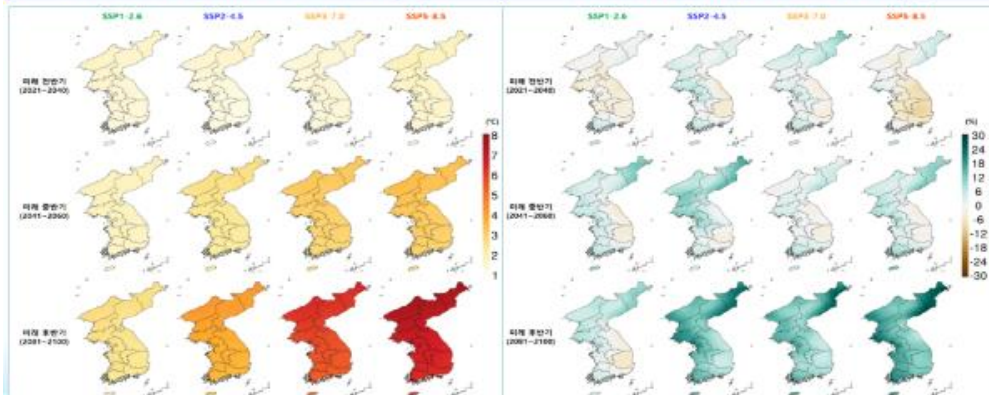
2. 기후변화 장기 전망

한반도 연평균기온 및 평균 강수량 장기전망

- 온실가스 배출경로(SSP)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4종(SSP1-2.6, SSP2-4.5, SSP3-7.0, SSP5-8.5) 분석결과
- 연평균기온은 미래 후반기(2081-2100)에 현재 대비 +2.6~7.0°C 상승 전망, 북부지역 상승폭 큼
- 평균 강수량은 미래 후반기에 현재 대비 +2~13% 증가 전망, 북부지역 비교적 더 많은 증가폭 보임

한반도 온실가스 배출경로(SSP)에 따른 현재(1995~2014년) 대비 미래 기간별 한반도 연평균 기온 변화(°C)

한반도 온실가스 배출경로(SSP)에 따른 현재(1995~2014년) 대비 미래 기간별 한반도 연평균 강수량 변화(%)



자료: 국립기상과학원(2021),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개정판, 17 페이지, 19페이지

2. 기후변화 장기 전망

한반도 극한기후지수 장기전망

- 온실가스 배출경로(SSP)별 기후변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 분석결과
- 극한 고온현상 현재 대비 증가, 극한 저온현상 현재대비 감소, SSP5-8.5에서 경향 뚜렷
- 극한 강수량 및 극한 강수일수 모두 증가, SSP5-8.5에서 5일 최대강수량 미래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6.1mm, 41.0mm 증가, 상위 5% 극간강수일 미래 후반기에 약 30% 증가

현재(1995~2014년) 대비 미래 기간별 한반도 일 최고기온 연 최대값(상)과 일 최저기온 최소값(하) 전망(°C)

한반도 온실가스 배출경로(SSP)에 따른 현재(1995~2014년) 대비 미래 기간별 한반도 연평균 강수량 및 강수일수 변화



자료: 국립기상과학원(KM20),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SSP1-2.6/SSP5-8.5에 따른 기후변화 전망, 13-20 페이지.

- ▶ SSP3, 연평균온도 1.5°C와 2°C 상승 시나리오, 북한 매년 경제 손실 각각 279.9백만 US\$, 283.5백만 US\$ 추정

자료: UNESCAP(2022), "DPR Korea Disaster Risk", <https://rap.unescap.org/country-profile/9984-paragraph-id--20750>검색일: 2023.03.27

10

3. 북한의 자연재해 특징 및 기후위기 진단

북한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특징

- ▶ 기후위험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홍수와 산사태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크며, 매년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인명손실 위험도가 높음
- ▶ 가뭄은 공간적 영향 범위가 가장 넓고 노출 인구가 가장 많으며, 가뭄에 따른 식량 감소로 인한 건강과 인명 피해가 가장 광범위함
- ▶ 자연재해 빈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현상 빈발, 하천관리미비, 재해예방시스템 부재, 산림 및 토양 황폐화,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토지 및 수자원 이용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안보위협

- ▶ 한반도 연평균기온 및 평균 강수량 장기 전망에서 북한 지역의 기후변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
- ▶ 중장기적으로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 극한기후 빈발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재해 위험성 및 피해 증가 우려, 특히 산악지역의 급속한 온난화는 고산 지역의 생태계 취약성과 동계 적설량 감소 등에 따른 수자원관리 체계 취약성 초래
- ▶ 기후변화 취약성과 자연재해 빈발, 그로 인한 토양유실과 산림생태계 파괴는 곡물생산 감소, 인프라 붕괴, 만성적 식량난 및 경제난 등 사회경제적 피해로의 악순환과 사회적 위기를 초래 예상
- ▶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도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에 직면
- ▶ 북한의 기후위기는 남한과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평화와 안보의 위협 요소 대두

11

Ⅱ. 북한 기후위기와 한반도 안보위협

1. 안보위협 분야 구성

북한 기후위기 안보위협 분야: 물, 해안, 생태계, 에너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 수단에서 밝힌 기후변화 영향

부문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 적응 우선 대책
공통	·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증가	-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 능력 강화 - 북한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관측망 개선 - 부정적 영향과 적응 대책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지역사회 기반 재난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 주요 하천 유역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수자원	· 가용 수자원 감소 · 수질 악화 · 홍수·가뭄·산사태의 빈도와 강도 증가	- 수질 오염 방지 기술 및 효율을 수질정화 기술 도입 - 주요 하천 유역의 통합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 수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소비 시스템 확립 - 저수지·하천 관리 역량 강화
농업	· 재배·양식에 적합한 지역의 변화 · 작물 재배 기간의 변화 · 곡물 생산성 감소 · 해충 피해 증가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 농경지 토양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 확립 - 해충 방지와 잡초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확립
해안 지역	· 해안 침수 · 해안선 후퇴 · 염수 침투 · 홍수 피해 증가	- 해안지역의 통합 관리 역량 강화 - 해안지역 사회기반시설(방파제, 침식 방지 시설 등) 건설 - 인구와 경제활동의 재배치
공중 보건	· 전염병 발생 증가	- 위생 및 전염병 방지 활동 강화 - 온열질환 관련 의료시설 강화 - 전염병 데이터베이스 및 상시 질병감시체계 확립
생태계	· 생물 군집 구조 변화 · 생물종의 수와 서식 범위 변화 · 생물종 서식지 손실 · 산림 해충 피해 증가	- 훼손된 산림 복원 및 지역사회 화목림 관리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해충 발생 억제 및 통합 관리 - 황해 해안 지역 생태계 보전 시스템 개선 - 기존 천연보호지구 관리시스템 개선

자료: 조장현 외(2019), "일련도 국제가능 발전을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북한 환경 성과 지표조사에 통한 대외 진흥성 증진 방안도 기원 구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22. 등자료. ORR(2019), "Trilateral Nationa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FCCC", p. 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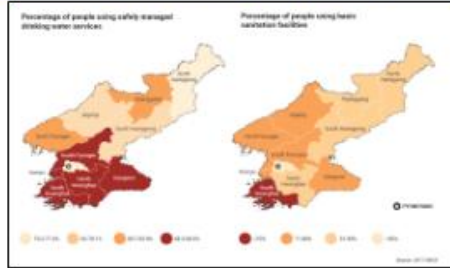
13

2. 물 분야 안보위협

물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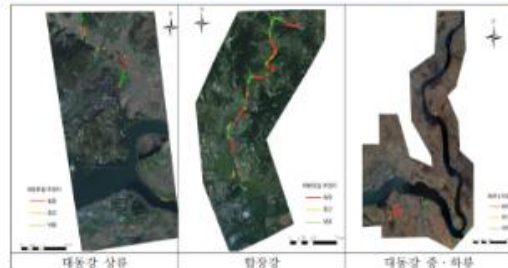
-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열악
- 대도시, 공업 및 광산지대 하천 수질오염 심각, 무분별한 하천 개발
- 하천유역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기능저하, 하천 인프라 미비 및 홍수 예방 기능 상실

북한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접근 현황



자료: UN(2019), DPYBases Needs and Priorities, p.8.

대동강 상류, 합창강 및 대동강 중하류 제방유실 추정지



자료: 주장진(2013), 대동강 하천기동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4차), p.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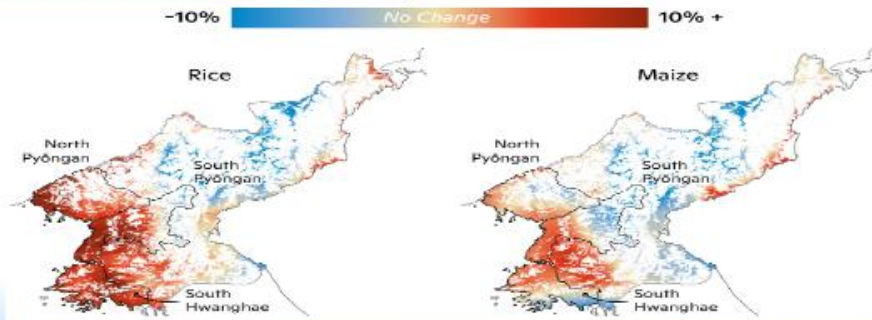
- ✓ 대규모 수인성 질환 발생 및 전파로 북한주민 생명과 건강 위협
- ✓ 홍수와 가뭄 취약지역 자연재해 피해 빈발 식량난, 환경난민(탈북과 타지 이주) 발생
- ✓ 대도시와 산업(광산)지대 하천 및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공급 및 주민 생명과 건강 위협

2. 물 분야 안보위협

물 분야 기후변화 현안과 안보위협

- 기온, 강수량의 변화로 서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 감소 가능성
-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 북한의 쌀과 콩의 곡창지대 30%, 2035년까지 매년 최대 3개월 극심한 가뭄 발생
- 쌀 수확량 감소는 7년에 한번에서 5년에 한번으로 자주 발생 전망

식량수확 실패 확률의 변화



출: 2015-2020년 대비 2025-2040년의 쌀(왼쪽)과 옥수수(오른쪽) 수확 실패확률의 분포
 자료: Catherine Ott et al.(2021), Security and Climate Risk: Confronting Climate in North Korea, Security, Stability & Climate Change,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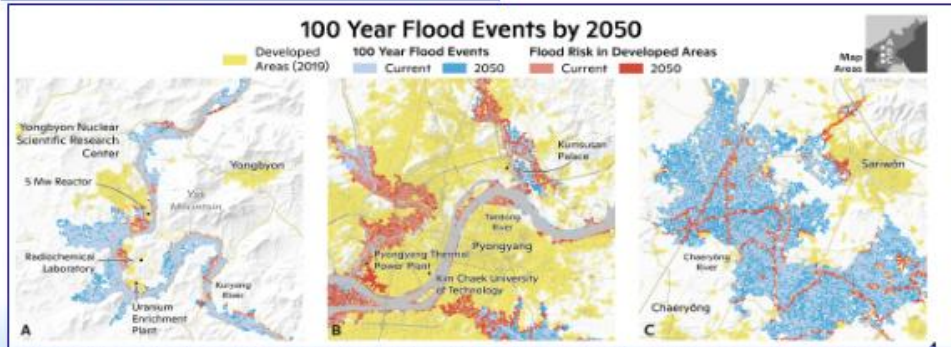
15

2. 물 분야 안보위협

물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 홍수 취약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주거, 상업 및 교통 인프라, 농업시설 위험 상승, 산림황폐화로 홍수 위험 가중
- 홍수 위험 대응 자원 배분과 시설 및 주민 배치를 둘러싼 사회적 내부 갈등 촉발 가능성
- 영변핵시설 등 군사시설, 공업/광산 시설에서 심각한 방사성물질, 중금속 토양/수질오염 가능성

2050년까지 100년 빈도의 홍수 발생 범위



출처: (A) 공보 핵과학연구소, (B) 위성, (C) 동해북도 지역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 발생 범위 (한재/하영석) 재:2021년(조진 과한재), 개발된 지역(노천)은 건물 및 기타 인프라를 주로 덮는 도시 내 지역
자료: Catherine Oh et al.(2021), Security and Climate Risk: Converging Crises in North Korea: Security, Stability & Climate Change, p.4.

18

2. 물 분야 안보위협

물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 북한의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변경 물 관리 및 이용
- 공유하천 상류지역 개발과 산림황폐화로 수질 및 기후변화 취약성 악화



자료: 강원도(2021.05.25), "남북 강원도 공유하천 가스조사 및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 2020년 제1차 KCS 남북환경포럼-경평지역 및 공유하천 협력방안, 7페이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36, pp.34-41.

- ✓ 극한기후 집중호우 빈발과 북한측 무단방류, 댐 안정성 문제로 남한 하류 홍수 위험
- ✓ 강수량 감소 추세에서 북한의 유역변경으로 남한 하류 유량 감소 및 가뭄 위험
- ✓ 개발과 산림황폐화 토사유출로 수질오염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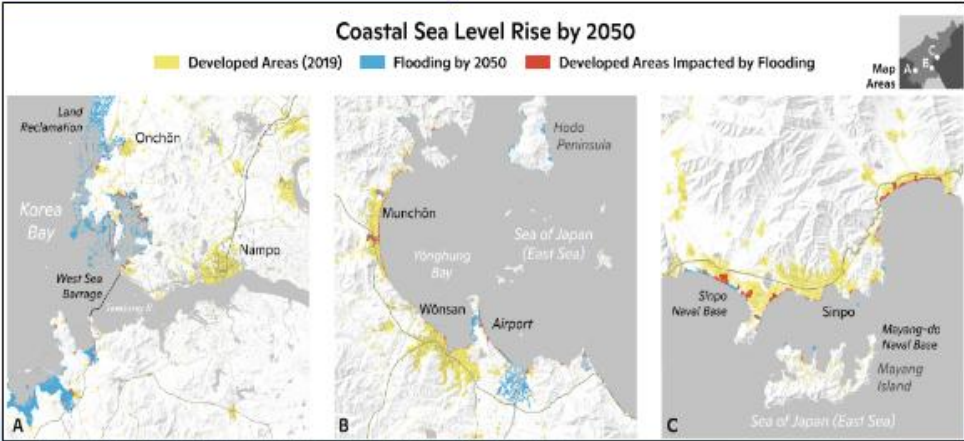
17

3. 해안지역 안보 위협

해안지역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 2050년까지 해수면 0.3m 상승, 북한 주민 55만 3천명 홍수 위협
- 남포, 원산, 신포 등 주요 항구 및 해군기지 홍수 위협

2050년까지 연안 해수면 상승



18

4. 생태계 분야 안보위협

생태계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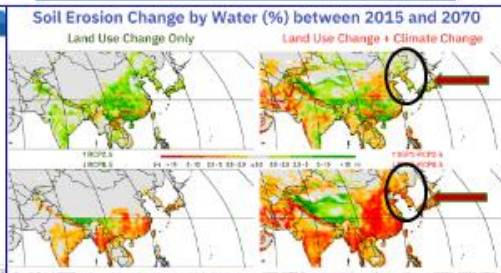
- 기후변화와 산림훼손화 및 토양유실, 개발의 상호작용으로 생물다양성 손실 및 서식지 훼손 가중
 - 2018년 현재 북한 산림훼손지는 전체 산림면적의 28%(262만ha), 2008년(284ha) 대비 4% 감소
- 서식지훼손과 연계된 야생동물 이동 영향

북한의 산림실태 지도 및 산림면적 변화



자료: 주영민(2020.11.17), "포스트 코로나시대 남북 환경협력 방향", '2020 서울환경대우 발표자료'.

2015~2070년 물의 토양침식 변화(%)



자료: 박훈(2021), "전반도 기후변화에 영향 받은 지역가능발전목표(SDGs)의 남북협력", 원자료: DRIK(2016),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FCCC.

- ✓ 한반도 전체의 자연에 기초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기반 위협
- ✓ 서식지감소로 야생동물 이동과 질병전파로 축산업 등 농업 위협
- ✓ 자원 개발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결부된 감염병 발생과 전파 위협

19

4. 생태계 분야 안보위협

생태계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 DMZ 일원 경기도와 강원도에 기후변화, 개발의 영향으로 북한지역 서식지 감소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 이동 및 전파 고착화 위협, 국가 동물방역안보 위협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요인과 결부된 인수공통 감염병 매개체의 이동으로 북한 내 감염병 창궐과 대규모 사망자 발생 가능성, 남한 전파 등 국가 감염병 방역안보 위협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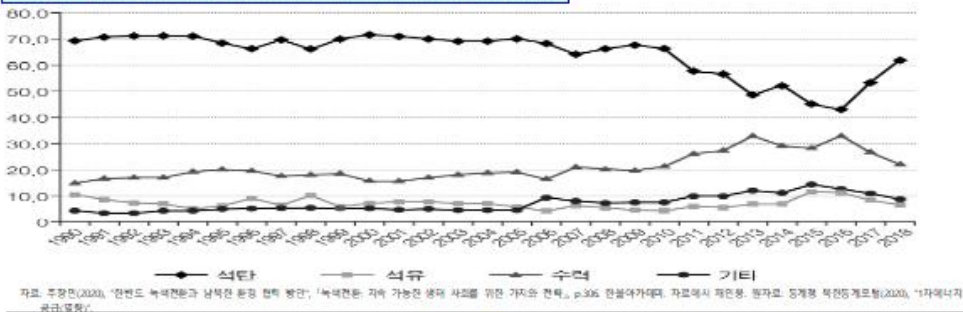
20

5. 에너지 분야 안보위협

에너지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 기후변화로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석탄발전 증가로 남한 지역 대기오염 영향 가중
- 전력 확보를 위한 접경지역 수력발전 가동으로 임진강 수자원 및 수력발전 영향 가중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유지/확대 및 국외감축을 위한 남북협력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북한의 일차에너지 구성비 변화 추이(1990-2018) (단위: %)



- ✓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국민 건강안보 위협
- ✓ 임진강, 북한강 수자원 고갈 및 수력발전 에너지안보 위협
- ✓ 국가 '탄소중립안보'에 부정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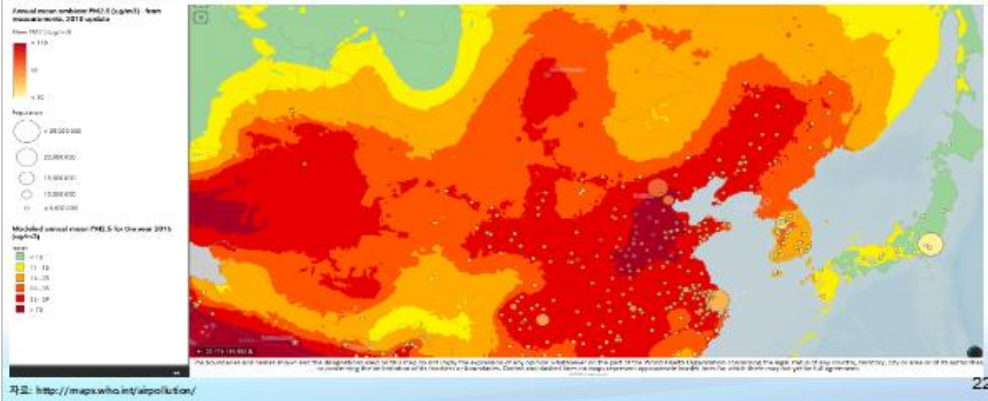
21

5. 에너지 분야 안보위협

에너지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 북한 실내 및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인구 10만 명 당 238.4 명으로 전세계 최고, 남한 23.2 명, 전세계 평균 92.4 명(WHO, 2017)
- 한미대기질 공동연구(KORUS-AQ 2017) 연구결과에서 남한의 PM 2.5 농도 9%가 북한 영향 추정(김순태, 2019), 대기질 및 국민건강 위협

WHO 추정 연평균 PM2.5 농도($\mu\text{g}/\text{m}^3$) 지도(2016)



22

5. 에너지 분야 안보위협

에너지 분야 기후위기 현안과 안보위협

- 임진강, 북한강 유량 급격한 감소 및 북한강 수계 내 발전량 감소로 수자원 안보,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안보 위협요소로 등장
 - 군남관측소 유입량 29%(갈수기 53%) 감소, 화천댐 유입량 29.7%(갈수기 45.7%) 감소 추정
 - 임남댐 건설 전 대비 화천댐 발전량 30% 이상 감소, 춘천댐 발전량 20%정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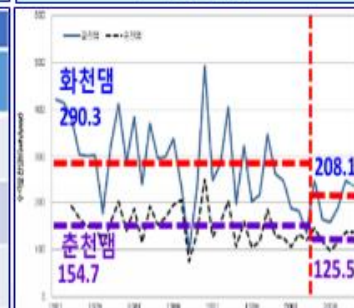
황강댐 담수에 따른 임진강 군남관측소 유량 변화

구분	홍수기-갈수기		갈수기	
	유입량 (m^3/s)	강수량 (mm)	유입량 (m^3/s)	강수량 (mm)
황강댐 입수 이전 (~2007)	138.7	115.5	45.7	45.3
황강댐 입수 이후 (2007~)	98.3 (29% ▼)	113.9	21.5 (53% ▼)	46.3
전체기간 (1991~2017)	113.7	115.5	30.7	45.9

임남댐 건설에 따른 북한강 화천댐 유입량

구분	홍수기-갈수기			갈수기		
	유입량 (m^3/s)	홍수량 (m^3/s)	강수량 (mm)	유입량 (m^3/s)	홍수량 (m^3/s)	강수량 (mm)
임남댐 운영 이전 (~2003)	73.7	74.9	3.1	28.9	38.8	1.2
임남댐 운영 이후 (2003~)	31.8	48.0	3.3	13.7	25.3	1.6
전체기간 (~2017)	62.0	61.1	3.2	21.8	31.6	1.4

임남댐 운영에 따른 화천댐/춘천댐 수력발전영향



자료: 강지훈(2021.05.26), "남북 협정지역 및 공유수역 협력이 필요하다", 2020년 제1차 K2G 남북한공통-경정지역 북공유수역 협력방안-자료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14-16.

23

6. 북한 기후위기 안보위협 요약

분야별 주요 안보 위협

◆ 물분야

- ✓ 안전한 음용수 부족, 자연재해 빈발로 주민 건강/생명/재산 위협, 식량난, 기후환경난민 발생
- ✓ 기온 및 강수량 변화, 가뭄 빈발에 따른 곡물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난 가중
- ✓ 극한강우 빈발로 홍수위험 상시 노출, 홍수 대응 사회적 갈등 촉발, 군사시설로부터 오염가능성
- ✓ 임진강, 북한강 남북 공유하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물이용 분쟁 촉발 가능성

◆ 해안 및 생태계 분야

- ✓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주요 항구 홍수 위협 가중
- ✓ 생물다양성 손실, 서식지 훼손 등과 연계된 야동동물이동에 따른 야생동물질병 전파 위협
- ✓ 접경지역 인수공동감염병 등 동물 및 인간 방역안보 위협, 임진강, 북한강 수생태계 영향

◆ 에너지 분야

- ✓ 대기오염 악화로 국민 건강안보 위협
- ✓ 임진강, 북한강 수자원 고갈 수력발전량 감소로 농업/어업 피해, 수자원, 에너지 및 탄소중립 등 다차원의 안보 위협

- 북한 기후위기는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북 접경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기후안보 문제로 대두
- 남북한 주민과 한반도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정책 수립 및 대응 필요

4

Ⅲ. 북한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그린데탕트

1. 기후환경 분야 대북 정책 성찰

기후환경 분야 대북정책: 한반도 그린데탕트

- ◆ 기존의 안보 및 통일정책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전통적인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전개
- ◆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
 - 안보와 통일정책의 내용과 영역이 환경문제, 기후변화문제 및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로 확장
 - 비전통적 안보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최근 추세에 따라 환경/기후 정책과 안보/통일 정책의 융합정책



한반도 그린데탕트

남한과 북한, 동북아의 주요 당사국들이 한반도와 역내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문제 및 자연재해에 공동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산업을 통해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하여 남북한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상생·통일을 지향하는 안보정책이자 통일정책

28

1. 기후환경 분야 대북 정책 성찰

기후환경 대북정책 전개과정 및 현황

역대 정부의 기후환경 분야 대북 정책 구조와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추진전략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제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세부계획/사업	- 북한 산림복구 - 에너지협력과 DMZ 생태·환경벨트 구축 - 남북공동 기후변화 대응/감축전략 마련	- 녹색 경제협력 - 접경지역·DMZ·백두산 회산 등 분야별 공동연구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설치	- DMZ 한·경관광벨트 - 한반도 생·영인천공동체(보건+환경) 구축 - 산림분야 협력,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 DMZ 국제평화지대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대북 정책 구조와 주요 내용: 그린데탕트 정책 재추진

국정목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
약속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주요 내용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DMZ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7), 『윤석열정부 100대 국정과제』, 158페이지.

27

1. 기후환경 분야 대북 정책 성찰

기후환경 분야 대북정책 한계와 전환 필요성

✓ 기능주의적 접근법 및 실효성의 한계

- 역대 정부, 기능주의 접근법으로 안보/통일 정책의 하위로서 기후환경 분야 대북정책 추진
- 전통적인 안보분야 긴장상태에서 기후환경 협력의 가능성 및 긴장완화 효과(spill over)의 실효성 의문

✓ 안보 개념 확장을 통한 그린데탕트 정책 한계

-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기존의 안보 개념의 확장을 통한 그린데탕트 정책 한계 노정
- 전통안보와 비전통 안보의 이분법적 구분의 가능성, 대량살상무기(전통안보)와 코로나19 및 자연재난(비전통안보)의 중요성, 위험성의 판단 기준 근원적인 질문 제기됨

(김상혜(2021), '코로나19의 상황과 백신의 세계정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 북한 기후위기의 위험성 증대

- 물, 해안, 생태계,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과 한반도 생태계의 기후안보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위협 요소로 대두



➤ 북한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적 접근 모색 필요

- 한반도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독립변수이자 핵심 안보요소로서 북한 기후위기 접근
- 한민족과 한반도 자연생태계 모두를 포괄한 '안전보장과 생명보호' 차원의 접근

28

2. 북한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대응체계 구축방안: 대북 안보의 핵심 분야로 '기후안보' 위상 정립 및 대응체계 구축

➤ '북한 기후위기 대책반' 설치 운영

- 국가안보실에 부처 및 관련 지자체 담당자 참여 '북한 기후위기 대책반' 설치 운영
- 북한 기후위기 안보위협 단기/중장기 대책 및 긴급대응방안 수립
- 임진강/북한강 홍수/수자원, 야생동물방역 및 감염병 방역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 북한 기후위기 실태조사/모니터링/예측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북한 기후위기 실태조사/모니터링/예측
- 북한 기후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북한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

- 임진강/북한강 수해방지 대화체널 복원 및 수자원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모색
- 북한 자연재해 긴급 대응 및 식량, 의약품, 복구 물자 인도주의 지원 모색

➤ 북한 기후위기 대응 국제 공조체계 구축

- 북한 기후위기 대응 국제 네트워크 및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 국제기구 주도 북한 기후위기 대응 국제 공조체계 구축

29

탈핵과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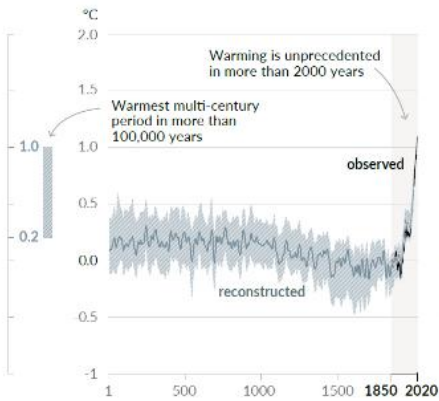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 · 한신대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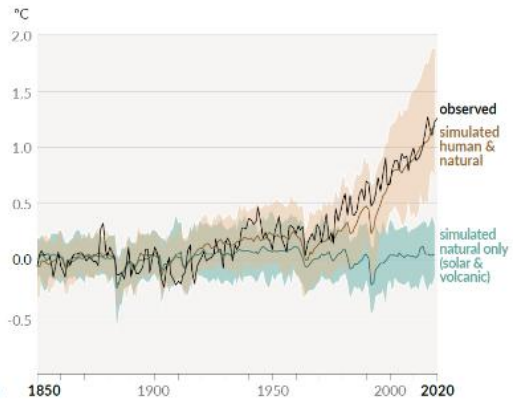
1. 기후위기와 에너지

Changes in global surface temperature relative to 1850-1900

a) Change in global surface temperature (decadal average) as reconstructed (1-2000) and **observed** (1850-2020)



b) Change in global surface temperature (annual average) as **observed** and simulated using **human & natural** and **only natural** factors (both 185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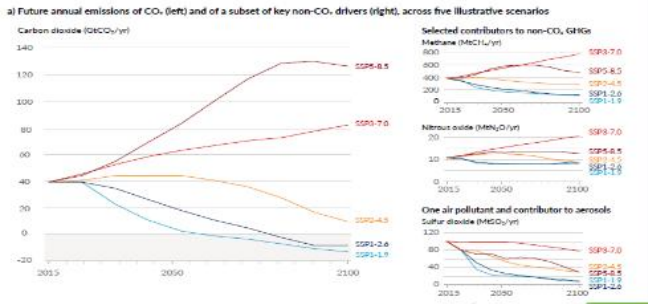


출처: IPCC 6차 보고서(2021.8.9)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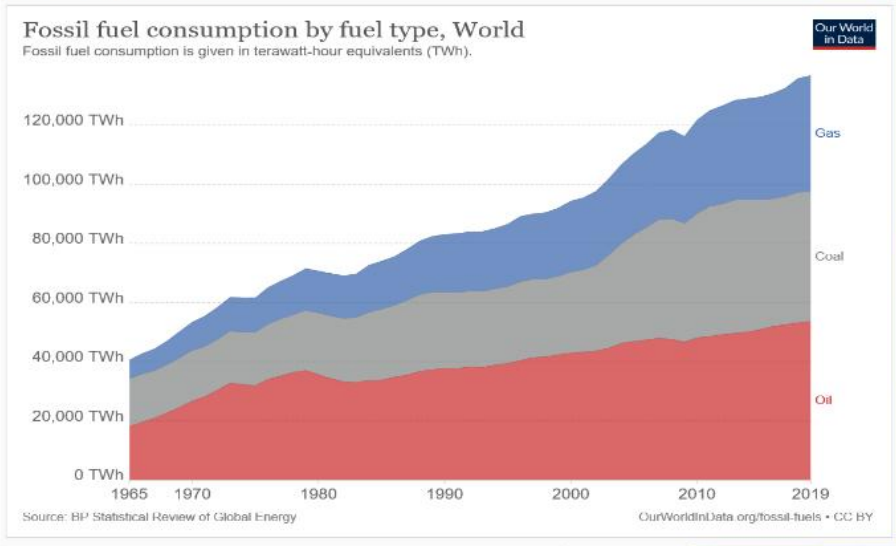
● IPCC 제6차 보고서 (AR6 Working Group I)

- 기후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자명함(unequivocal). 산업화 대비(1850-1900년) 지구 평균기온은 1.09°C 상승함.
-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마지노선인 1.5°C 상승하는 시점을 2030~2052년으로 예측. 6차 보고서는 그 시기가 9~12년 더 빨라짐.
-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사용, 탄소배출감축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섯 개의 시나리오 구성(SSP1-SSP5)
- 어떤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2040년이 되기 전에 산업화 이전보다 1.5°C 상승, 2060년까지는 1.6 °C에 도달.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제거 활동을 전제로) 2100년까지 1.4도 정도로 하락.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나리오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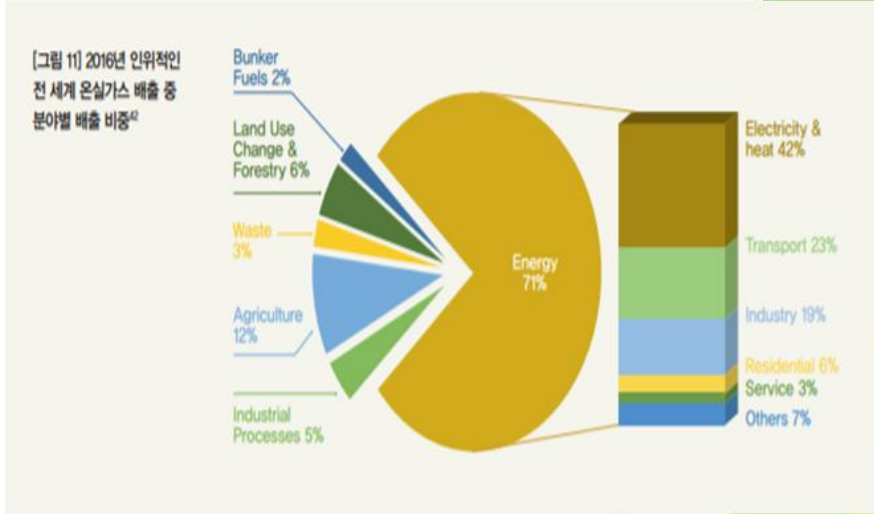
Future emissions cause future additional warming, with total warming dominated by past and future CO₂ emissions



●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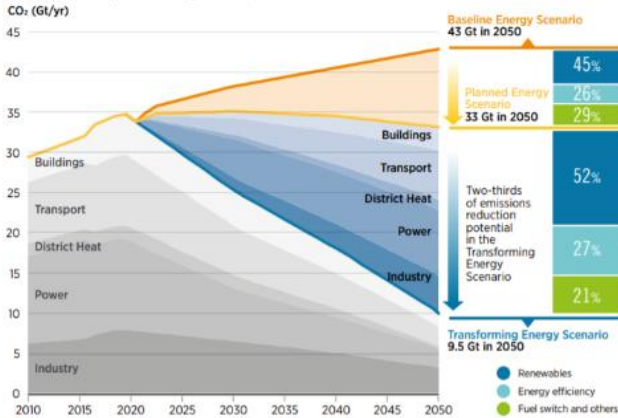
● 온실가스 배출 중 에너지의 비중



출처: WWF, 2020,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

● 화석연료의 전환

Figure S.7. The bulk of emission reductions: Renewables and efficiency
Energy-related CO₂ emissions, 2010-2050



Based on IRENA analysis

출처: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IRENA), 2020, Global Renewables Outlook: Energy Transformation 2050, p.33

-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2010-2050년간 감축해야 할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 기초선(BAU)은 2050 43Gt, PES (Planned Energy Scenario) 에 따르면 33Gt, TES(Transforming Energy Scenario)에 의하면 9.5Gt
- 건물, 수송, 지역난방, 발전, 산업 부문

2. 탈핵과 에너지 전환

● 국가별 핵발전소 운영/건설/폐쇄현황(2022.4)

IAEA 발표 기준 국가별 핵발전소 운영·건설·폐쇄 현황 (2022.4)

핵발전소 운영 국가									
국가명	운영중	건설중	폐쇄	국가명	운영중	건설중	폐쇄		
1 미국	93	2	40	18 핀란드		5			
2 프랑스	56	1	14	19 헝가리	44				
3 중국	54	16		20 슬로바키아	4	2	3		
4 러시아	38	4	9	21 대만	3		3		
5 일본	33	2	27	22 아르헨티나	3	1			
6 한국	24	4	2	23 아랍에미리트	2	2			
7 인도	231	6		24 불가리아	2		4		
8 캐나다	19		6	25 브라질	2	1			
9 우크라이나	15	2	4	26 남아공	2				
10 영국	11	2	34	27 멕시코	2				
11 스페인	7		3	28 루마니아	2				
12 벨기에	7		1	29 벨라루스	1	1			
13 독일	3		30	30 이란	1	1			
14 스웨덴	6		7	31 슬로베니아	1				
15 체코	6			32 네덜란드	1		1		
16 파키스탄	6		1	33 아르메니아	1		1		
17 스위스	4		2						

핵발전소 신규 건설 국가				핵발전소 폐쇄 국가			
국가명	운영중	건설중	폐쇄	국가명	운영중	건설중	폐쇄
1 터키		3		1 이탈리아			4
2 방글라데시		2		2 리투아니아			2
				3 카자흐스탄			1
합계					441	52	199

- 2022년 4월 4일 기준, 전세계 33개 국가에서 441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
- 현재 한국 등 17개국에서 52기를 신규 건설하고 있으며, 독일과 대만의 탈핵 정책을 포함하여 22개국에서 199기를 폐쇄함
- 전체 핵발전소의 평균 가동은 31.4년
-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폐쇄될 발전소는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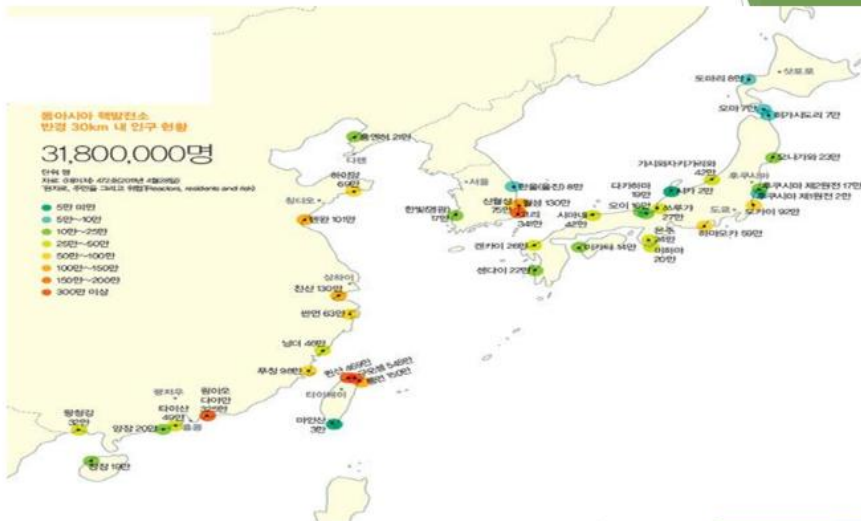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정의행동, 2022, <기후위기, 핵발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

● 동아시아 핵발전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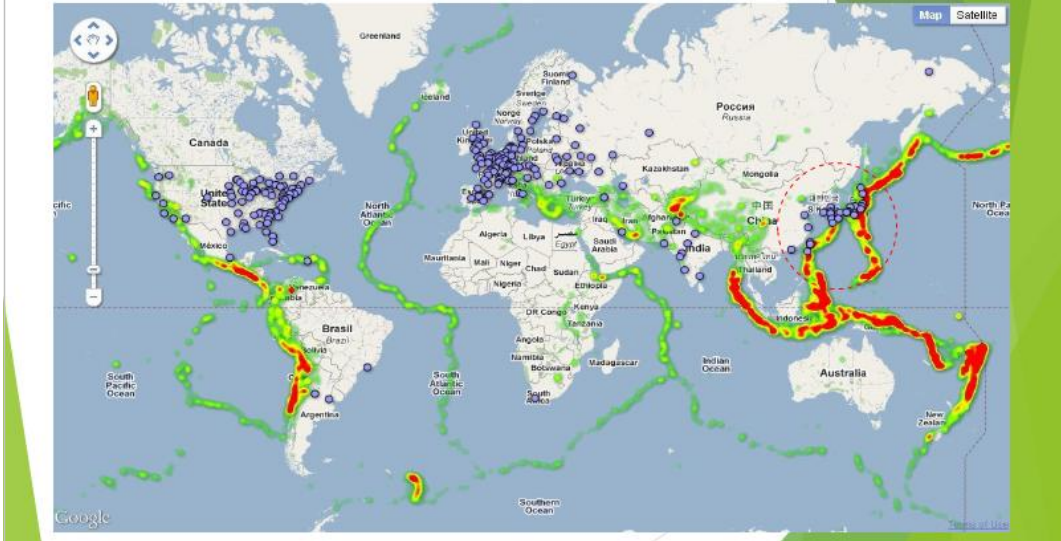
동아시아 지역(중국/일본/한국/대만)에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129개임. 전세계에서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493개임. 동아시아가 26.1% 차지함



● 동아시아 핵발전소 현황



● 전 세계 지진대와 핵발전소 현황



● 위험한 에너지 핵

- 핵발전의 운전 중 안전성도 불안하지만, 일상적인 위험은 방사성폐기물
 - 방사성폐기물은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로 구분
 - 저준위/중준위 그리고 고준위는 확연하게 처리방법이 다름
 - 사용후 핵연료는 대단히 위험한 독성물질. 중간저장은 최종처분 이전까지 40~8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처분은 인간생활과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으로 초창기(10만 년 이상)의 지질 안전성을 요구함.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지하 500~1,000m 깊이의 심지층에 처분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심지층 처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이 고준위 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상태임. 10만년 이상의 지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폐기물 이동시의 오염 문제는?
 - 완벽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 최초에 시작할 때는 초기 핵발전소의 수명이 다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함
- **착륙할 곳이 없이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비유도 있음

● 위험한 에너지 핵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2011년 3월 11일)



<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

- 원전 오염수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서, 하루 최대 180톤 정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음.
- 해양 방류시 방사성 오염물질이 동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방류후 200일이면 제주도, 280일이면 동해안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ALPS는 삼중수소(tritium)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 장치. 삼중수소는 원전 냉각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로서, 신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내에 있는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음. 세포핵 내에서 삼중수소가 기존의 수소를 대체하게 되면 여기서 베타 방사선이 방출되어 DNA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자체가 헬륨으로 변할 수도 있음. 헬륨은 DNA의 구성요소로 머물러 있지 않은 물성을 갖고 있어서 삼중수소로 결합되어 있던 부분이 파괴될 가능성이 커진짐.
- 하지만 ALPS가 모든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님. 실제로 일본 언론들도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루테튬(ruthenium)이나 스트론튬(strontium) 같은 방사성 물질은 상당수 제거하지 못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가 추정함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 © NOAA

출처: <https://www.sciencetimes.co.kr/news/>

<참고자료> 핵오염수 투기(dumping)와 배출(discharge)의 역사

- IAEA 자료를 종합한 <우리농 아틀라스>(2020)에 의하면 구소련, 영국, 스위스,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1993년까지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렸다고 밝힘. 중저준위 핵폐기물만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함
- 1993년 러시아 백서 발간으로 1960년대부터 동해에 액체와 고체 상태의 핵폐기물을 약 2만t 버렸다고 밝힘
- 1975년 발효된 런던협약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만 해양투기 금지함. 중저준위핵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하지 않았음.
- 1993년 11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주도로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됨. 우리나라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에 걸림돌이 될까봐 주저하다가 협약에 가입조차 못했음.
- 런던협약에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dumping)는 금지되어 있으나 배출(discharge)은 허용되어 있음.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육상시설에서 터널을 통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어서 배출에 해당됨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2011년 4월, 일본 정부는 저농도 오염수 1만 2,000t 정도를 바다에 방류하여 우리 정부가 항의. 2013년에는 고농도 오염수 300t이 탱크설비 결함으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음. IAEA는 이 사고를 국제핵시설사고등급(INES) 3등급으로 분류(참고로 드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5등급, 후쿠시마 사고는 7등급)

● 핵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말 적은가?

- ㄱ IEA(국제원자력기구): 전과정평가를 하더라도 핵발전은 수력이나 풍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발전원.
- ㄴ 영국 서섹스대학 벤자민 K. 소바콜 교수 논문: 핵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4~288gCO₂eq/kWh(평균값은 66.08g). 풍력발전(9~10g), 수력(10g), 태양광(32g)보다 높은 수치임.

● 핵발전의 기회비용

- 핵발전소 부지선정, 설계, 시공, 가동까지 적어도 12년 정도가 소요(한국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5년 단위로 설정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 풍력터빈은 2~3년, 태양광은 2~3개월.
- 1.5°C 티핑포인트까지 남은 시간은 5~6년 정도. 핵발전소 추진하는 시간에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비용도 적게 들어감
- 2014년 기준. 세계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총 배출량의 42%. 이 중에서 석탄화력에서 73% 발생. 전체 발전비중에서 핵발전의 비중은 10% 남짓.
- 핵발전으로 화석연료 발전소의 1/3 대체하려면 1.4GW 신형 핵발전소 기준으로 대략 923기를 더 지어야 함.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3일마다 1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함. 화석연료 발전소의 절반을 대체하려면 일주일에 1기가 완공되어야 함. 현재 세계에서 가동중인 447기의 핵발전소 중 2/3가 2050년 전에 폐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지어야 하는 핵발전소 숫자는 더욱 더 늘어나야 함(년센스)

● 소형핵발전(Small Modular Reactor)은 대안이 될 수 있나?

- ✎ SMR이란 300MW 이하 용량의 소형원자로. 4세대 개념이기 보다 전통적인 경수로 규모를 줄이는 것 정도의 의미에 가까움.
- ✎ 과거 소련에서 300MW 이하 핵발전소 8기 건설함. 4기는 영구 정지. 나머지 4기는 조만간 정지되고 부유식 핵발전으로 대체될 예정(2020년 현재 2기는 대체됨). 중국이 자국과 파키스탄에 5기의 소형 가압경수로 가지고 있음. 인도와 러시아에도 몇 기가 있지만 어느 것도 SMR 논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나 계획은 아님.
- ✎ 신규 소형 핵발전소에 대한 관심 대부분은 화석연료 채굴을 돕기 위한 것. 러시아의 부유식 소형 핵발전(35MW 2기, 50MW 2기)의 주된 목적은 북극의 화석연료 채굴 작업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북극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것. 중국의 50~60MW급 시험로는 발해만의 유정 탐사와 남중국해의 심해 석유, 가스 개발에 동력과 담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
- ✎ SMR은 핵발전이 직면하는 네 개의 핵심문제,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확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움. 모듈의 대량생산과 조립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더라도 운영과 정비 비용은 핵발전소의 설비 용량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음. 결국 SMR이 대용량 핵발전소에 비해 건설 기간과 비용 같은 장점을 발휘할 수 없음.
- ✎ 워렌 버핏의 '미드아메리칸 에너지'는 2013년에 아이오와 주에 SMR 건설하려 했으나 좌초됨. 대신 100억 달러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함.

● 기후위기에 취약한 핵발전

- ✎ 9호 태풍 '마이삭'으로 2020년 9월 3일과 4일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1·2·3·4호기와 신고리핵발전소 1·2호기의 소외전원이 모두 상실되는 사고 발생. 6기 핵발전소 모두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신고리 3·4호기는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변압기 정전이 발생하고, 신고리 3호기의 터빈 건물 지붕 일부 파손.
- ✎ 2020년 9월 7일에는 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경주에 있는 월성핵발전소 3호기와 4호기도 가동이 중단. 2호기는 7일 오전 8시 38분, 3호기는 9시 18분경 터빈발전기 정지.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을 감소시키며 가동을 중단. 경북 울진의 한울핵발전소 1·2호기에서는 7일 오후 5시 45분경 방사선 경보가 발생. 한울1·2호기 액체 방사성폐기물 증발기에서 방사선 경보가 발생(출처 : 뉴스포털(<http://www.newspool.kr>))
- ✎ 그린피스의 한반도 대홍수 시나리오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전 국토의 5% 이상 침수(주로 해안가 시설이 피해). 핵발전소도 모두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서 침수에 취약함



● 기후위기에 취약한 핵발전

- ✎ 미국 플로리다 주 터키포인트(Turkey Point) 핵발전소 4호기도 2020년 7월 5일 호우로 터빈 발전기와 발전소가 불시 정지됨. 8월 10일에는 아이오와 주 듀안 아놀드(Duane Arnold) 핵발전소가 **폭풍에 생각담 파손되고 외부 전원이 차단되며 정지**됨
- ✎ 온도도 문제임. 핵발전은 냉각수가 필수라서 해안이나 강가에 위치함. 냉각수는 약 7~9도 상승한 온배수를 배출함. 배수구 부근의 수온을 올림 → 수생 생태계 파괴 문제 심각함.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멈춰야 함. 프랑스(원전 비중이 큰 나라)가 여름에 정기적으로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도 수온 상승을 고려해서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임
- ✎ 2003년 폭염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19개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줄여야 했음. 공기온도 상승도 발전소 내부 과열 초래. **폭염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던 2019년 7월에도 냉각수 과열을 우려해 남부 고틀슈 핵발전소 2기의 가동을 중단**함
-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기후위기가 미국 핵발전소 운영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폭염, 안정적인 물 공급, 범람과 허리케인은 핵발전소 운영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시장성을 고려했을 때 신용부담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

20

●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가동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하고, 탈핵 로드맵 제시 방침을 천명함
-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18%로, 석탄은 39%에서 25%로,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2%에서 57%로 달성하겠다고 함
- **원전이 0%로 되는 해는 2083년임.** 건설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수명이 60년인 점을 고려함
- 독일의 에너지 믹스를 보면 원전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30%였으나 2030년 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함
- 대만은 98%의 완공률을 보였던 원전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13.7%였던 원전 비중을 2025년에 0%로 하겠다고 선언함

● 윤석열 정부의 탈핵 정책 폐기 및 제2의 원전 르네상스 추구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2022.8.31)
- 2030년까지 원전 23.9 → 32.8%, 재생 발전은 30.2 → 21.5%
- 2036년까지 원전 12기(10.5 GW) 계속 운전, 준공 예정 원전 6기(8.4 GW) 반영 예정
- 2024년 재생에너지 예산 6045억원(2023년 1조 490억원에서 42% 감소)
- 2024년 SMR 예산 332.8억원(2023년 38.7억원에서 8.6배 증액)
- 2024년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 112억원(2023년 88.9억원)
-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000억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원 신설
- ◆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 전년 대비 17% 감소(2.5GW)
-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 위해 한국 대통령이 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녹색사다리) 약속(뉴델리, 620 정상회의)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발표(2023.3.21)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CO₂e, 값호는 20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2030 목표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 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35.0 (32.8%)	
	수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소	(-)	7.6	8.4	
	탈루 등	5.6	3.9	3.9	
	흡수	CCUS	(-)	-10.3	-11.2
	제거	국제감축	(-)	-33.5	-37.5

<그림 1>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단위:100만t CO₂e)



출처: 아이가스저널 온대일 사이트, [Zoom in]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첫사건 공개 (kgasnet.com)

출처: 산업계 눈치 본 탄소중립계획, 산업계가 진짜 바깥까 - 시사IN (sisa.in.co.kr)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 과제들



-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 개선
 -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물질이 가능케 하는 기능
 - 에너지 공급보다 최종 용도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주택 단열 성능 개선, 자동차 공유 시스템 등
- (거의) 모든 것을 전력화하기
 - 내연기관에서 전기 이동수단으로 전환
 - 난방은 연소기보다 열펌프, 히트펌프 사용
 - 위험요소(최소급속 채굴에 따른 위험성)도 고민해야 함
-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기하급수적 성장
 - 재생에너지의 초기 투자 비용을 화석연료 비용보다 떨어뜨리려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가격은 향후 수십년간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해져서 산업영역에서 화석연료 능가할 것

출처: 상트릭 디슨·드글레브 외 지음, 주선영/김미정 옮김, 2023, <모두를 위한 지구>, 학한책가게, 209-222쪽 참조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및 자치

- 지역 밖의 거대기업에서 지역 안의 공동체 기업으로



출처: <http://m.ecan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1098360921>

한국의 핵발전

- 한국수력원자력발전/한국전력
- 거대 공기업
- 공급 확대와 이윤 창출이 목표



- 덴마크 미드델그룬 풍력단지*
- 지역에너지공사/협동조합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 코펜하겐 주민의 소유/통제

* 2000년 설립, 세계 최대 해상풍력, 20기 풍력터빈 (총 40MW 용량). 코펜하겐 전력의 4% 공급, 지분의 50%를 미드델그룬 풍력발전 협동조합(4만5천명의 조합원)이 소유, 나머지는 지역 전력회사가 소유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Middegrunden>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평화, 비핵화 및 인권을 위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경제제재

조지 로페즈 (미국 노틀담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명예교수)

서론

저는 이 글에서 경제제재가 북한 내 핵개발과 적대감을 억제하지 못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평화, 비핵화 및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는 한미일 3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개발 및 실행하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계의 이러한 전략적 비전의 윤곽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 국가의 대중적 의견이 제가 앞으로 제시할 권고사항과 다른 방향일 때, 새로운 정치적, 화해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가톨릭교회의 탁월한 도덕적 비전과 목소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의적절하고 절실히 필요한 대화의 장에 저를 초대해 주신 2023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 여러분과 함께 제 생각을 나누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사항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며, 자국 사회의 경제를 파괴하는 제재에 점점 더 둔감해지는 그러한 위협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의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와 사그라들 줄 모르는 핵야욕을 분석하는 분석가로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정권 내 핵교리에 관한 헌법 개혁까지 단행하며 강력한 핵 및 군사 능력을 달성하고자 말겠다는 김씨 정권의 새로운 위협과 완강한 의지를 보면서 그 어떤 진정된 변화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핵능력이 북한 정권의 생존 인식에 핵심이라는 점은 이번 북한 사례가 핵확산 전환 모델에 매우 독특한 위협으로 작용할 여러 다른 요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제재 성공에 관한 정책연구에서는 저의 분석에 대해 “하지만 북한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정책과 전략적 논의를 여러분 앞에서 제시해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포럼에서 우리는 이전에 함께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시도한 적 없었던 이런 기회를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적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지역에 더 큰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군국주의를 몰아내며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진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김씨 정권이 교리적이든(현재 북한 헌법에 명시됨) 실제적이든 현재의 핵프로그램 중단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예입니다. 현재 불일치와 위협적인 전쟁 행위의 차원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매우 깊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갈등을 북한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이웃 나라인 일본, 그리고 지구 반대편만큼 먼 미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 사이에 다루기 힘든 분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평화 연구와 경제제재 분야의 학자이자 실무자로서, 그리고 유엔의 북한 핵개발 통제 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저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상황과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놓친 여러 기회를 더욱 일관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이나 비핵화와 같은 더 큰 목표에 대한 희망보다는 위협을 지금보다 적게 느낄 지역 환경을 조성할 새로운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이후 북한의 핵능력은 실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핵무기 운반 시스템 모두에서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부분적인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이나 미국 또는 다른 나라와의 평화 협상에 저항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북 의제에만 고유한 여러 사안을 놓고 한국과 협상을 하든, 상호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든, 중단기적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제재조치에서 다른 중요한 양보가 이루어진대거나 의미 있는 새로운 안보 협정이 보장되기 전까지 핵무기 시스템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재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사항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재 전망에 대해 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먼저 주장하는 바는 제재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제재가 남용, 때로는 오용되는 등 제재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자들이 제재가 언제, 왜, 어떻게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현실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재의 성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접근 가능한 지침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자들은 주로 제재 성공을 위해 잘 정립된 매개변수보다는 제재 대상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재를 부과하는 사람들, 제재가 부과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정책 및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부과하거나 재승인하려는 제재 도구와 그 도구의 효과를 증명하는 증거 사이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하려는 상황처럼 해당 사안이 가장 위협하고

어려운 경우 이와 같은 책임감은 특히 더 요구됩니다.

우선, 제재 목표 준수에 있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비율은 사안별로 기껏해야 20~30%에 불과하며 대략 2년 반 이내에 달성됩니다. 그 후 제재 대상국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자제재(예: 유엔 및 지역 기구)가 자율제재보다 더 성공적이었으며,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이 주로 유엔의 제재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적 협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자율제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 및 기타 유사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파트너국이 공동으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제재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일관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작동할 때 효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제재가 대상국의 변화된 행동을 끌어내지 못하기도 하나 대부분 제재 대상국에 대한 정책 목표가 분산 또는 불분명하거나 제시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비현실적일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요구 사항 중 일부가 확대되기도 하는데 이를 ‘골대 옮기기(목표 변경을 의미)’라고도 칭합니다.

경제적인 고립이나 제재 대상국의 지도층 붕괴를 목표로 무역과 금융 부문에 과도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면 제재를 통해 의도한 정치적 양보나 정책적 변화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제재의 결과는 제재 대상국의 강화된 입장 그리고 국민의 사회 경제적 삶의 모든 요소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 실패의 원인은 제재 대상국이 광범위한 부문별 제재체제 강화에 필요한 외교에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사안을 겨냥한 다양한 제재체제 전반에 걸친 일반화를 넘어 저는 이제 북한과 관련해 이 지역의 두 가지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관심 사안은 바로 제재조치가 감씨 정권의 자국민 인권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가? 제재가 마침내 북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인권에 관해서 보자면 일방이든 다자제재든 그 어떤 제재도 잔혹한 독재자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제재 자체만으로는 권리 침해자들이 최악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으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부과된 제재는 상당한 예방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가, 기업이 그리고 잔인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비호 하는 경찰과 군인 등 다양한 중간급 경제 및 정치 세력에 대한 자산 압류 및 여행 금지 조치를 통해 일부 잔학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권제재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현과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선별적으로 부과되었을 때 가장 일관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권제재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요인들은 현재 인권 개선을

위한 제재가 왜 김정일 정권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를 보여줍니다. 북한 정권은 국민에 대한 중앙통제력이 너무 강해서 인권 침해 행위가 만연해 있고,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북한 정권의 정치, 사회 질서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정권의 고위 핵심 세력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에 보답하는 형태로 정권 결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재가 정부 엘리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합니다. 다시 말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은행가, 기업가, 경찰과 군사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핵비확산을 강요할 목적으로 제재를 부과하여 특정 국가에 스스로 가장 강력한 안보라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란과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리비아와 핵전환 협상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제재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중요한 원료와 자금 감축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며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곧 새로운 안보 보장을 약속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문제 해결 외교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는 대상국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긴장 완화의 새로운 방향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에 참여함으로써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중국이 다른 지역 주체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주의 깊게 살피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재정의된 비전과 참여 역할에서 비롯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 간 직접 재협상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도자대 지도자로 이루어지는 정상 외교의 길이 항상 열려있음을 북한에 제안하거나, 여러 외교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해당 지역의 긴장 완화 조치를 집단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각 주는 점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협력 작업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을 다루는 하위 수준의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남북한 실무 그룹이 특히 북한의 고립으로 중단되었거나 단순히 사라졌던 일부 협력 협정 재개 등을 다시 논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비핵화 달성이나 북한의 행동 개선을 목적으로 부과한 최대 수위의 압박 제재가 실패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요 정책 변화를 유용한 교섭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변화와 제재 완화가 평화를 향한 더

많은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약 60년 전 미국과 당시 소련 사이의 초기 핵무기 통제조약의 토대를 놓았던 프레임워크를 잘 다듬고 적용한다면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기본 윤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의사소통 및 행동-대응 과정을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IT, Graduated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 Reduction)’라고 합니다. GRIT 프레임워크를 통해 라이벌 당사자들은 아무리 심각한 불일치라도 전쟁 회피에 대한 공유된 이해관계 그리고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최소한이라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조기의 일방적인 양보가 완고한 적에게 미미하다 해도 상호 양보를 약속받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적의 극심한 불신과 적대감을 뛰어넘기 위해 GRIT는 긴장 완화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에 일방적인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GRIT 전략의 선두 국가로서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전쟁이나 선제공격에 의존하지 않고 안보 위기와 북한과의 핵대치 상황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을 공언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국은 다음의 여러 행동을 통해 해당 선언의 진지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1) 한국 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을 끝내는 전면적인 평화 조약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과의 휴전 상태를 종료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선언합니다.

2) 지역 및 글로벌 인도주의 기관을 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건 및 식량 분야 물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와 북한의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연된 구호품을 제공합니다.

3) 북한을 이런 제안 논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화 전략의 개요를 제시하는 정상회담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지역의 관련 국가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이런 행동에 이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새로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모두의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다자간 대화에 참여하여 긴장 완화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오랜 적들이 적대감을 거두고자 노력할 때 여러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GRIT는 북한이 이러한 초기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적절한 화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은 화해를 위한 네 번째, 심지어 다섯 번째 계획 또는 양보까지도 제안하고 실시해야 함을 사실로 상정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계획된 군사 훈련의 대폭 축소 또는 연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확산 전환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다룬 문헌과 관행에는 모두 강력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 감축과 다양한 금융 및 분야별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제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실제 핵무기 전환 관행은 제재 부과에서 벗어나 제재 완화와 비확산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 대상국이 이웃 국가나 제재를 부과한 다른 적들과 강력하고

일관되며 적극적인 외교를 벌인다면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외교에서는 징벌적 제재나 지속적인 외부 군사 위협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제재 대상국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뿐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완전히 경제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핵비확산과 군국주의에 대한 점진적 포기가 그에 걸맞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책의 극적인 변화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현재의 군사 및 안보 긴장의 극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는 예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새로운 양보 지향적 접근 방식은 현재의 총체적 제재 접근 방식에 비해 무기 생산 확대와 무기가 사용되는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을 훨씬 낮춥니다.

새로운 외교와 정책 성공을 위해서 요구되는 가톨릭적 관점

이런 포럼이 제가 옹호하는 전략 및 정책 선택 비전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이 지역의 비핵화와 북한의 행동 변화에 관해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윤리적 근거가 현재의 군사적, 정치적 사고의 흐름과 반대로 향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핵 무장화와 군사화는 모든 면에서 이제 핵억지만이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전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는 모든 도덕적 조치를 강구하여 핵무기의 생산, 존재, 잠재적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비전에 따라 강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가 최근 강화된 군사 훈련을 통해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북한에 과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각국 의사결정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할 수는 있으나, 이런 정책은 또 다른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행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완벽히 갖춘 적극적이고 진지한 외교 정책의 부재는 근시안적 입장임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교 부재 속에서 김 씨 정권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만이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정책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부자 신분으로서 저는 40년 전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평화의 도전’이라 불린 핵 딜레마에 대한 서한에 밝힌 통찰력 있는 주장을 생각해 봅니다. 소련과 우리의 무기와 위협을 정당화하는 냉전 핵논리의 본질을 마주했던 주교들은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핵억지가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없도록 보장하여 최고의 도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극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켜본 주교들은 사실상 의심의 여지 없이 억지 논리에 새로운 도덕적 감성을 불어넣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교들은 초강대

국 간 이러한 공포의 균형에 대한 유일한 윤리적 정당성은 역지가 안정 수단으로서 일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핵군비 경쟁 감소와 궁극적으로는 종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역지에 대한 엄격한 조건의 도덕적 수용…”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군사 훈련 강화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의 의지에 따른 응징적 대응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인지 우리 3국 지도자들에게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주교들이 1983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아시아 군사 훈련 확대 역시 ‘엄격하게 조건화된 일시적인 도덕적 수용’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군사 훈련 축소에서 시작하여 한반도에 더욱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도덕적 수용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재 사용을 훨씬 뛰어넘어 정책 대화에 불어넣을 수 있는 다른 측면의 가톨릭적 통찰력 역시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피스빌딩 접근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나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적의를 가라앉히는 평화를 구축할 때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 마더테레사 수녀, 민족 지도자 간디와 같은 위대한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우리 서로를 교섭 상대로 하여 함께 마주 앉아 평화를 구축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들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인자들, 어찌면 미래의 대량 학살 지도자, 부패한 관료 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우리는 증오하는 적들과 악랄한 자들이 내놓는 결점까지도 포용하는 진정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먼저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또는 현 단계에서라도 북한 정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서약할 때만 우리가 북한 정권과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할 협상이야 말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피스빌딩 관점에서 저는 제가 제안한 새로운 차원의 생각이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협 역학 감소, 군사 훈련일시 중지, 미사일 시험 발사 축소 및 핵개발 감축은 가능한 일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전환으로 가는 길은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최근 더욱 악화된 70년간 이어진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 몇 년 안에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헌신은 기독교 원칙에 따라 곧 오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다는 헌신과 마찬가지로, 이 포럼에서 울려 퍼질 우리의 목소리가 일기될 독특한 비전과 인내일 것입니다. 늘 전쟁 발발의 공포와 함께 지내 온 지난 70년의 끔찍한 유산을 견뎌낸 것은 우리가 다음 70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점진적 첫 단계에 대해 명확하고 희망에 찬 비전을 갖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 지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적에 대한 사랑이라는 미덕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을 마련하고 이런 행동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저는 이번 포럼에서 한미일 3국의 가톨릭교회가 맡은 역할은 우리 행동의 근본적인 바탕이 복음과 평화의 신학에 있음을 친애하는 3국 국민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제재의 전략적 논리와 그에 따른 군사 정책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행동은 전쟁을 피하고, 핵무기를 종식하며, 논쟁이 많고 양립할 수 없는 국가 체제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말과 행동으로 다하는 우리의 헌신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

먼저, 이런 훌륭한 컨퍼런스와 평화순례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사례에서 배웠듯, 유일한 화해의 길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며 (냉전이 절정을 이루던 때 폴란드 주교단이 독일 형제 주교단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만나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토론하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를 취하거나 상호 이해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술 토론은 서로에 대한 인간적 이해의 차원과는 별개로 자유로워야 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대북 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 세 가지 발제문은 모두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는 2003년 북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경제 개발과 교역, 청정 개발과 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산림과 유기 농업, 자연 보호, 습지와 철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환경연구원 주장민 선임연구위원님의 북한의 기후 위기와 한반도 그린데탕트 발제문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관련 자료를 많이 모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도와 데이터가 무척 유용했습니다. 여기에 제 의견 몇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1) 거시 기후(macro-climate) 대 미시 기후(micro-climate)

북한은 모든 관련 문서와 협약에 서명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유엔(UN)의 기후 변화 의제를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자연재해와 식량 문제의 원인을 기후 변화로 돌리며 어느 정도 ‘책임 전가’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와 관련된 현안 대부분은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산림 파괴, 유익한 나무 면적(tree cover)의 부족, 우기에 홍수에 취약한 강 인근의 부적절한 땅을 경작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은 종종 타국이나 자국의 재난을 설명할 때 기후 변화를 언급하는데, 이는 특히 산림 관련 미흡한 환경 보호에 관한 정직한 토론을 회피하는 구실이 됩니다. 다행히 2012년부터 2014년, 활발한 조림 캠페인을 펼쳤지만(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 선전에서 이를 과거 국내 정책의 오류와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2)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및 기타 자연재해와 질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을 인지했고, 이 전염병을 들여온 중국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돼지

들과 이후 야생 멧돼지들, 그리고 국경 넘어서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된 것은 북한의 돼지 사육 방식의 결과입니다(북한 민가에서 돼지를 키울 때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게끔 방목해 야생 멧돼지까지 감염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남한의 대응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곳에서 군인들이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야생 멧돼지들을 사살 후 매몰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효과는 미비해 보입니다.

(3) 현재로서는 한반도 그린데탕트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데탕트 전성기(2007년까지,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고 계획만 무수히 많았습니다. 모두 좋은 계획이었지만 성과는 미비하거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자간 협력이나 제3국 혹은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그린데탕트'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정치적으로 훨씬 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직접적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신대 이상헌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제문에서 언급된 원자력 대 재생 에너지 이슈와 관련해 독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원전을 포기하고 올해 마지막 원전 4기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전과 마찬가지로 이 원전들은 수십 년간 매우 순조롭게 운영됐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일은 다른 발전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독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겪는 일입니다. 다만 구소련은 예외적으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의 상황이 체르노빌 원전의 기술이나 사고 상황과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일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1년 독일은 탈원전을 위한 12개년 계획과 탈석탄화력발전을 위한 25개년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독일은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극도로 낮은 효율성) 지역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유독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갈탄을 노천 탄광에서 채굴하여 과거에도 지금도 다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천 탄광은 주로 동독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과거 이곳의 실업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2011년 가스 발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러시아 가스(그리고 석유)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태양열과 풍력이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가스가 '교량 기술(bridge technology)'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자 독일의 딜레마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이 크게 늘어나면서 좋은 시기(일중이나 연중)에는 거의 100%에 달하는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었지만, 안 좋은 시기에는 달랐습니다.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때, 예를 들어 밤이나 겨울과 같은 Dunkelflaute(Dunkelflaute) 시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교량 기술'인 가스가 없으니 독일은 유해한 석탄화력발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자유 진영(시장 중

심) 및 시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이 이념적 이유로 원자력의 재가동이나 수명 연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청정 에너지로부터 가장 멀어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히게 됐고, 에너지 가격은 최고치에 달하게 됐습니다. 특히 빵집이나 소규모 수공업자 등 소상공업체들은 비싼 에너지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천 명이 폐업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 강국으로, 이는 전적으로 자국 내 실패, 특히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의 결과입니다. 설사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생산 능력이 10배 더 늘어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적, 환경적 이유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상헌 교수님, 이런 배경 때문에 저는 탈원전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해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이 인류의 탄소 배출량 감축, 나아가 언젠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봅니다. 여기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 독일이나 한국은 너무 작은 국가라 탄소 배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인도, 미국, 중국과 같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와 협력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분명 원자력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고, 특히 치명적인 사고 측면에서 다른 발전 기술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기술(소규모의 모듈화된,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을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때 원자력 연구의 선두에 섰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세계 기후에 끼치는 가시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풍력과 태양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에 현재 많은 자금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군사적 남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고, 민간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더 양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간 사용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핵확산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해답을 강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에 관한 로페즈 교수님의 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 제재가 목표했던 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고(사실 주요 제재의 목표는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물론, 정권 교체를 위한 최대 압력 행사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제재의 피해가 지도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논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저희 사업 역시 제재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산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 수입이 제재로 인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 측 저희 파트너가 제재 면제를 요청하기 정

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면제 요청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시선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과 일방적으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과 적대적인 나라들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재 완화와 평화 협정이 거의 유일합니다.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선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그냥 제공하게 되면 북한을 완전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악의 기근 상황에서도 항상 유리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잘못 보는 이유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 즉 북한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시피 합니다. 1980년대 김일성이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를 방문했을 때, 그는 배고픈 공산주의자만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생활 수준 향상에 반대했습니다(동독 기록물 공개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북한이 정권 안정을 위해 대규모 기근으로 인한 피해를 또다시 겪기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들을 먹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정권이 라면 어떤 선의를 베풀더라도 개방으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가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 사회과학, 환경 등의 분야(지나치게 기술적이지 않은 분야)를 연구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우리는 구소련의 사례에서 해외에서 교육받은 소수의 관료가 페레스트로이카 초기 정책 수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배웠습니다.
- 이와 비슷하게 국제기구나 협회와 협력하여 전 레벨에 걸쳐 인턴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산림 분야), 람사르지역센터(환경 및 습지 분야), 칭화대 유해화학물질센터(환경 오염 문제 관련), 이 세 기관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데요,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수천 곳에 이를 것입니다.
-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행정적으로 용이한 제재 면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소 허용 기준(예를 들어,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소규모 장비)의 제정이나 북한 내 깨끗한 금융 메커니즘의 시급한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유엔(UN) 수준에서 협상하거나 중국과 논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문제 관련 및 북한 내 국제기구 등 관련자들의 이용을 위해 '깨끗한 은행(clean bank)'을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이 정권 생존이라는 목표에만 관심을 쏟고 다른 문제에는 무관심하기에 이런 일들을 대규모로 허용할지에 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개선하고(북한 사람들은 거만하지만, 외톨이 같은 지위에 크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평화 조약, 합동 군사 훈련 중단, 지도자급 회담과 같은 대규모 유인책은 논쟁을 거듭한 협상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에 여기서 신학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이 더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들과 식사하셨고, 죄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한반도의 기후 위기와 인권(평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북한에 대한 유엔의 역할과 제문제

-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
- 평등권 원칙 존중에 기반한 국가 간 우호 관계를 구축한다.
-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 인권 존중 의식을 증진한다.
- 한 가지 종종 잊는 *사안*: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행동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인권, 핵무기 그리고 권력

- 유엔 인권위원회
 - 무차별적 행위는 생명권 존중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국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는 핵군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 2022년 7월 유엔 총회
 - 인권을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인식한다.



제재

- **전문가 패널** – 유엔 산하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제재의 영향에 관한 패널(유엔 안보리 결의 1874(제26항)에 따라 2009년 구성)
-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제재를 부과하는 회원국은 **제재 대상국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그러나 제재가 인권과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북한 역시 유엔 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몇 가지 생각해볼 점...

- 인권, 평화, 안보, 비확산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 평화와 정의: **책임과 참여**에 관하여
- **도구화**의 위험성에 관하여



박헌동 블라시오 아빠스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 위원장으로써 북한의 기후 위기와 그린데탕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추장민 선생님과,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상헌 교수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와 기후 위기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희망과 지구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사랑이라는 미덕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을 마련하고 참여하자’는 조지 로페즈 교수님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기후 변화의 이슈는 인간의 인권과 평화의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2023.10.13.~19)에 일본에서 열린 한일탈핵평화순례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탈핵평화순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부터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동해안의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들을 방문하였고, 올해는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나고야 서쪽에 위치한 쓰루가, 미하마, 오이, 다카하마, 몬주 핵발전소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센다이 교구를 방문하여 인근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지점 4킬로미터까지 접근해서 현지의 모습을 보았고, 센다이 북쪽의 오나가와 핵발전소도 방문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탈핵을 위해 40-50년을 보낸 현지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탈핵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한국과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문제는 전세계가 탈핵의 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국면에서 다시 핵발전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기존 원자로 보다 규모가 작은 소형핵발전기(SMR: Small Modular Reactor)가 새롭게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핵발전이 지닌 여러 문제들(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확산)과 핵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여러 데이터를 인용하여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핵발전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낮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핵발전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핵발전을 진흥시키는 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3년 10월 4일 발표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라>(Laudate Deum) 2항에서 “제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고 파괴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의 응답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고 말씀하셨고, 긴급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중국-대만-한국-일본에서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129개이고, 이 지역의 핵발전소는 전세계 핵발전소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핵발전소들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면서, 핵발전소 사고는 단지 한 지역이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올해 4월 15일 마지막으로 운영되던 원전 3기의 발전을 중단함으로써 탈원전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인류는 60년 넘게 핵에너지의 혜택을 누렸지만,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약 26만 톤은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임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을 미래의 세대에 미루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세대간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추장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북한 기후 위기와 한반도 그린데탕트에 대해서 들으며, 기후 위기가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야기할 것인지 조목 조목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 식량, 보건 등의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요소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비교해도 무시하지 못할 중요성을 가진 주제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통일부의 과제로 북한과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 대응 등 환경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여 ‘남북 그린데탕트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한 모두 세계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후 변화 대응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매년 홍수, 태풍,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적 피해도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기후 위기에 더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과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림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것이 자연재해를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도 2019년부터 이러한 자연재해가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로동신문에서 언급되는 기사 양도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이슈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독립변수이자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대응하여,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견해는 아주 필요한 오늘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야기된 식량 부족, 물의 부족, 사회 인프라의 붕괴, 경제적 빈곤, 보건 위생

의 위기, 분쟁 가능성의 증대 등은 단순히 각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인권과 평화의 범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기후 위기 국면에서 잘 협력하여 극복할 수 있을 때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Round Table

2023

Catholic Korea Peace Forum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교회

시라하마 미츠루 주교 • 일본 히로시마 교구장

김주영 주교 • 한국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제라드 파워즈 • 가톨릭 피스빌딩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주드 랄 페르난도 •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

오혜정 수녀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제니퍼 조이 텔퍼 • 피스 카탈리스트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디렉터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이 10월 26-29일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가운데, 27일 첫 콘퍼런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교회'라는 주제의 라운드 테이블로 마무리됐다.

이날 앞선 주제 발제는 '핵무기의 위협과 군비 경쟁', '기후위기와 한반도의 인권(평화)'으로 진행됐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시라하마 미츠루 주교(일본 히로시마 교구장), 김주영 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제라드 파워즈(가톨릭 피스빌딩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주드 랄 페르난도 교수, (아일랜드 더블린대 트리니티 칼리지), 오혜정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제니퍼 조이 텔퍼(피스 카탈리스트 인터내셔널)가 자리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그것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한국과 미국, 일본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를 구축해 온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시라하마 미츠루 주교(일본 히로시마 교구장)

전 세계에서 불신이 악순환되고 있다. 그 원인은,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인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에 기반해 억지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무력을 끊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며 비폭력 길을 제시했다. 우리는 무력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첫 걸음은 무엇일까? 나의 의견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파트너십’을 더 확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르친 평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자들로서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평화의 문화를 만들자.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는 형태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채널을 구성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 정전 70년이 지났지만, 전쟁 재발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후의 전쟁은 분명 핵전쟁일 것이고 그 피해는 히로시마의 몇 배일 것이며 인류 멸망 가능성도 있다. 가톨릭교회는 비폭력의 원칙을 굽혀서는 안 된다.

김주영 주교(춘천교구장,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여러 발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보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앞당길 수 있을까 생각했다. 어둠이 짙을 때 더 강렬하게 빛이 오듯이, 어찌면 지금 이 현실이 짙은 어둠일 것이다. 각자 자리에서 또 연대의 자리에서, 전쟁을 모르는 지금 세대가 전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성을 한다.

한국 사회는 전쟁 위기에 대해 막연한 위협감은 느끼지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분단되었지만 아직은 평화로운 이때,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평화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회칙 안에서 모두 거론됐다. 교회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을 위해 연대하는가다.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조차 그 가르침과 해법을 알고 있는가.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세상 안에서 풀어내고,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연대하는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 성령의 요구를 알아듣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면, 그 태도로 북한을 만나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면을 이해하며 공감해야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제라드 파워즈(가톨릭 피스빌딩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에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무기에 의한) 역지력은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 방지와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 논리는 여전히 많지만, 집단방어 체제와 무기 체제에 의존해 온 나토(NATO, 서유럽 집단방위조약)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으며, 지속가능한 유럽의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포럼으로 국제적 공동체, 조직으로서 갖는 기회를 잘 활용하고, 12억 가톨릭 인구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평화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평화 구축과 관련해 교회가 갖는 부족함은 평화 구축이 자기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역할, 자리, 정체성, 직업을 이용해 평화 구축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 평화 활동의 조건은 평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이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세심하며 비폭력적 헌신이 필요하다. 교회가 평화 구축을 현실과 접목해야 한다.

주드 랄 페르난도(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신앙인으로서 참회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야 한다. ‘평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실제 정치를 봐야 한다. 제국주의적 정치도 봐야 하고, 신앙의 눈으로 본 정치적 시각도 필요하다. 각 국가는 사회, 정치적, 국제적 관계를 ‘힘의 균형’ 차원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앙에 기초한 관계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예수는 평화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현실 정치의 ‘평화’는 대량 살상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평화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종교적 평화는 희생이다.

전쟁의 반대는 창의성이며,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증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한을 대하면서, 우리는 꼭 제재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몇 번이라도 양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두려움은 정치에서 비롯되며,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알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오혜정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도회 역시 분단과 전쟁의 쓰라린 역사를 겪었다. 이산가족, 한국전쟁 희생자들, 원폭 피해자, 이스라엘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니 힘이 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자 평화다. 항의를 받더라도 평화를 위해 서명해야 하고, 핵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북한은 정말 많이 변했지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의 북한을 아직도 기억한다. 북한은 남이 아니라 한 형제로 고백하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적대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언론의 역할이 크지만 제대로 된 정보나 소식을 일반 국민이 접할 수 없게 한 책임이 있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 밤 9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조선가톨릭교회 신자들과 함께 드렸다. 그들도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니퍼 조이 텔퍼(피스 카탈리스트 인터내셔널)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미국은 피해자만이 아니며 침략자만도 아니라 둘 다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겸손해야 한다. 미국의 개신교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미국의 군사력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 남북의 역사를 알기 전에는 미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다. 오만하고 무지했다. 그러나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예수의 평화에 대해 느꼈다. 예수는 형제와 화해하고, 으름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했다.

우리는 실패한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상처를 더 깊게 하고 있다. 단절된 관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참회와 고백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총을 쏘는 한 폭력은 이어진다는 것을 봤다. 폭력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를 용서했고 희생했다. 이런 치유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희생자이자 침략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완전한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어렵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하고 트라우마 치유 등을 통해 압박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 <http://www.catholicnews.co.kr>〉



2023년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요약

A Summary of Our Journey towards Solidarity
for Peace in Northeast Asia
: from DMZ to Hiroshima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A Summary of Our Journey towards Solidarity for Peace in Northeast Asia: from DMZ to Hiroshima

During the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3, held from October 26 to 29 in Paju, DMZ and Hiroshima, participants congregated with the specific intention of visiting historical sites marked by conflicts and animosity. The primary aim of the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3 was to engage in substantive discussions surrounding the extensive suffering experienced by both humanity and the natural world, stemming from the consequences of war and the ongoing division of the two Koreas.

Participants conveyed our deepest condolences and apologies for the losses incurred and acknowledged collective responsibilities for both the past and the future. In praying for peaceful reconciliation during our journey from the DMZ to Hiroshima, participants gained valuable insights and encountered new approaches to reconciliation. These shared experiences have enriched us all. Through our reflections on the division, war, and nuclear weapons, we renew our companionship and journey toward peace in Korea and Northeast Asia.

Challenging questions that the participants posed in the Peace Forum include:

- How can the Church address the structures of division and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How can we influence political leaders to de-escalate hostilities and milit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How can we encourage Kim Jong-un to engage in dialogue?
- How can we achieve peace,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i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ak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to account?

- How is climate change a contributing factor to conflict in Northeast Asia and how can the Catholic Church respond?
- How can the Catholic Church better educate, evangelize, and empower people to practice peace-making and reconciliation?
- How can we address the related concerns of those opposed to Korean reunification?
- How can young Catholics contribute to a more just and peaceful Northeast Asia?
- How can the Church help frame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distrust and conflict in Northeast Asia?

Some Presentation and Conversation Highlights:

- Participants recognized the nature and impact of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intricate security dilemmas faced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resurgence of militarism, both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on a global scale, which has complex implications for the region and the world.
- Participants confronted the horrors and immorality of the nuclear bomb in Hiroshima and Nagasaki, delving into the known and lesser known histories. Participants affirmed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should never recur in human history.
- Given the complex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racterized by a multi-polar power structure and regional arms races, the use of any ki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es the potential for catastrophic consequences. The pursuit of peace demands arms control at the beginning and ideally, the abandonment of such weapons in the end.
- Participants concur that conflicts in one place can trigger a chain reaction of violence elsewher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dentify methods for applying positive pressure to stakeholders, encouraging the abandonment of policies that escalate military tension.

- The Catholic Church must offer a profound moral perspective to counter the prevailing “realpolitik” view that national security only comes from military buildup in Northeast Asia and instead, promote peaceful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Some Pressing Issues Identified:

- 1) The waning prospects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growing nuclear threats in the region
- 2) The proliferation of ‘a tit-for-tat’ mentality in the name of alliance politics
- 3) The ineffectiveness of ex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need to find new multilateral ways to engage diplomatically
- 4) The threats posed by environmental crises in North Korea and the resulting tensions in regional security
- 5) The disengagement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potential failure to address upcoming environmental and security threats
- 6) The risks associated with nuclear energy and its connection to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spirations Shared by Participants in the Peace Forum:

- According to Apostolic Journey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to Thailand and Japan (19-26 November 2019), Pope Francis clearly emphasized the immor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as follow; “With deep conviction I wish once more to declare that the use of atomic energy for purposes of war is today, more than ever, a crime not only agains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but against any possible future for our common home. The use of atomic energy for purposes of war is immoral, just as the possessing of nuclear weapons is immoral, as I already said two years ago.” Following the Pope’s statement, participants understood that the possession and use of nuclear

weapons by anyone is a threat to all and hoped that all nuclear weapons should be abolished.

- Participants support the necessity of creating Northeast Asia as a nuclear-free zone and the urgent need of exploring security for all without nuclear weapons.
- Participants agreed to work hard to establish cross-border relationships and engage in a substantial global dialogue regarding universal, verifiable nuclear disarmament. This concerted effort is essential for the permanent elimination of the nuclear threat.
- Given the complex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participants agreed to exert relentless efforts to establish gradual and reciprocal trust-building with North Korea by prioritizing dialogue and engagement.
- Participa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suming dialogue between two Koreas and the normalization of US-DPRK relations as urgent issue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 Participant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solidarity among the local churches in an effort to promote nuclear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environmental crises.

We are all deeply related and have shared experiences of immense suffering. We likewise share the responsibility of fulfilling God's vision although we recognize the pursuit of peace will face difficult challenges. We must look past the bitter fruits of war and continue to offer a prophetic vision of hope and build a path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ctober 29, 2023

Participants of the 2023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언론보도

Media Coverage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3

The Role of American, Korean, and Japanese Relig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언론 보도 목록 (총 34건)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URL
2023 -10 -09	가톨릭평화신문	한·미·일 주교단, 동북아 평화 위한 종교의 역할 모색	https://news.cpbk.co.kr/article/1112300?division=N_AVER
	아시아 투데이	천주교주교회의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개최 .25 일~29 일까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19010009632
	이데일리	한·미·일 주교들 한 자리에...'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 열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5526635774560&mediaCodeNo=257&OutLnkChk=Y
	충청투데이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 열린다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71900
2023 -10 -22	가톨릭신문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평화포럼 개최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0535
2023 -10 -24	KBS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미일 종교 역할...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내일 개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87964?sid=103
	KBS	"평화를 붓글씨로 구현"...평화국제학술대회 기념 서예전 내일 개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0737&ref=A
2023 -10 -27	가톨릭평화신문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군비경쟁 속 평화 해법 모색	https://news.cpbk.co.kr/article/1112675?division=N_AVER
2023 -10 -30	뉴스 1	"평화 기원을 붓글에 담다"...2023 평화국제학술대회 기념 서예전	https://www.news1.kr/articles/5214451
2023 -10 -31	가톨릭평화신문	JSA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한미일 주교 함께 모여	https://www.youtube.com/watch?v=N6Ayp1Ek0WU
11	가톨릭평화신문	강주석 신부 JSA 집결한 한미일 주교들 "한반도 위기 매우 심각"	https://news.cpbk.co.kr/article/1112756?division=N_AVER
12	CBCK 보도자료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마쳐	https://cbck.or.kr/Notice/20230532?gb&fbclid=IwAR17vK40CiJQqv4-QDsmC8D-hlfCojX_I5OyEmelbBQTdX6UnGqkLCY_gnU
13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한미일 종교 연대의 장 마련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2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URL
14	2023-10-31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모두가 연결된 세상, 모든 무기를 버리는 것이 최고의 안보"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3
15	2023-11-01	UCA News	Church forum seeks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화해와 평화 모색하는 가톨릭 포럼	https://www.ucanews.com/news/church-forum-seeks-peace-reconciliation-on-korean-peninsula/103128
16		가톨릭평화 신문	한·미·일 주교단과 청년들이 함께 평화의 기도를 바치다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03?division=NAVER
17		가톨릭평화 신문	한미일 교회, 한반도 평화 위한 연대 다짐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30?division=NAVER
18		가톨릭평화 신문	전쟁과 갈등의 역사 현장... '평화를 위한 연대' 희망을 찾다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78?division=NAVER
19		가톨릭평화 신문	불안한 한반도 상황... 평화 이끌어내는 교회의 저력에 주목하다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00?division=NAVER
20		가톨릭평화 신문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참가자들 "힘에 의한 평화의 허구성 체험해"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90?division=NAVER
21		가톨릭평화 신문	DMZ To HIROSIMA, 2023 가톨릭한반도 평화 포럼 현장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87?division=NAVER
22		가톨릭평화 신문	무너진 땅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평화'를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82?division=NAVER
23		가톨릭평화 신문	[사설] 기도와 회개의 마음으로 평화의 열매 맺자	https://news.cpbc.co.kr/article/1112739?division=NAVER
24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평화 구축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6
25	2023-11-02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한반도 전쟁의 상징 JSA, 평화 출발점이기를 간구하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8
26	2023-11-03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3 국 청년과 주교들, 평화를 묻고 답하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80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URL
27	2023-11-05	가톨릭신문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개최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91214&params=
28		가톨릭신문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컨퍼런스 주요 내용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91157
29		가톨릭신문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이모저모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1178
30		가톨릭신문	[현장에서] 역사 앞에 정직하다는 것 / 박지순 기자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1169
31		가톨릭신문	[사설]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1172
32	2023-11-08	bishops hawnmcknight.com	The Church and World Peace 가톨릭교회와 세계평화	https://www.bishopshawnmcknight.com/makingconnections/the-church-and-world-peace
33		가톨릭평화신문	[조민아 평화칼럼] 평화의 성사(聖事)	https://news.cpbk.co.kr/article/1112839?division=NAVER
34		일본 가톨릭신문 The Catholic Weekly of Japan	バジュー・広島 韓米日の司教ら集う 平和に向けた 宗教の役割考える 파주·히로시마에서 한미일주교모임 평화 위한 종교의 역할을 생각하다	http://www.cwjpn.com/cwjpn



참가자 명단

미국 주교단

- 존 웨스터 대주교 • 뉴멕시코주 산타페대교구장
 데이비드 말로이 주교 • 락포트 교구장, 미국천주교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리차드 페이지 주교 • 아이오와주 더뷰크대교구 교구장 서리
 윌리엄 손 맥나이트 주교 • 미주리주 제퍼슨시티교구장

일본 주교단

- 다카미 미츠야키 요셉 대주교 • 전 나가사키교구장
 시라하마 미츠루 알렉시오 주교 • 히로시마교구장
 가쓰야 타이치 베르나르도 주교 • 삿포로교구장, 일본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한국 주교단

- 이기현 베드로 주교 • 의정부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 인천교구장
 김주영 시몬 주교 • 춘천교구장, 함흥교구장 서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 전 광주대교구장
 박현동 블라시오 아바스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뇰 • 주한 교황청 대사관 교황대사 직무대행

스피커

- 가와사키 아키라 대표 • 피스보트 공동대표 겸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 국제공동운영위원
 김동연 도지사 • 경기도
 김성경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나가사와 유코 교수 • 국립대만대학교 및 중앙연구원
 백장현 교수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소장 •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오카와 치히로 교수 • 가나가와대학교
 오혜정 수녀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이상헌 이사장 •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 겸 한신대학교 교수
 이해정 교수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제니퍼 조이 텔퍼 • 피스 카탈리스트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디렉터, “나우” 참가자

제라드 파워즈 교수 • 가톨릭 피스빌딩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제임스 히난 소장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조지 로페즈 교수 • 노틀담대학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평화학 명예교수
 조호제 교수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인권학회 회장
 주드 랄 페르난도 교수 • 더블린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추장민 위원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용표 소장 • 평화나눔연구소 소장
 황수영 팀장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허승훈 교수 •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국제관계학 부교수
 샤오양 하오 교수 • 나고야대학교
 츠루하라 토시아스 교수 •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참가자

고명자 수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고민정 • 간호사, "나우" 참가자
 김승혜 수녀 • 사랑의 씨앗 수녀회
 김학배 신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남덕희 신부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민족화해센터장
 남승원 신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도현우 신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교류협력분과장
 맹제영 신부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무카디 크리스찬 • 예수회 신학생, 일본 선교사, 상지대학원 학생, "나우" 참가자
 미츠노부 이치로 신부 • 일본천주교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총무
 박건우 • "나우" 참가자
 박문수 위원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박은미 위원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배제나 • 조지타운대학교, "나우" 참가자
 변진홍 위원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신나리 • 기자, "나우" 참가자
 안재인 수녀 • 사랑의 씨앗 수녀회 총장
 여상기 위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자문위원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요시다 아야코 • 춘천교구
 요코야마 케이야 • 일본 상지대학교 신학과 학생, "나우" 참가자
 우치야마 나나미 •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지원자, "나우" 참가자
 이규수 교수 • 전북대학교 고려인연구센터
 이대훈 소장 •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소장
 이성훈 이사 • 팍스크리스티코리아

이수정 위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자문위원
이정심 • 의정부교구 문산성당, “나우” 참가자
양덕창 사무총장 •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전대희 신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정경일 박사 • 평화와 신학
조민아 교수 • 조지타운 대학교
카와카미 치소노 • 유치원 교사 “나우” 참가자
히루마 노리코 • 일본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헤이든 스미스 • 조지워싱턴대학교, “나우” 참가자

실무자

강주석 베드로 신부 • 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소장,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원 바오로 신부 • 의정부교구, 동두천성당 주임
황수경 라파임 수녀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
최소영 요한빈센 수녀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사무국장
버지니아 패리스 • 미국천주교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국제정책자문위원
김영희 사무국장 •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
장은희 간사 •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간사
서한나 위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나우” 참가자
다케우치 미노리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나우” 참가자
김예슬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나우” 참가자
소희연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나우” 참가자

민족화해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2023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골로 3,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중한 생명 수백만을 앗아 간 전쟁은 아직 정식으로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못한 이 대결은 지금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는 평화의 소명을 더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갈등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요즘 우리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던 대화는 중단된 지 오래고, 출구 없는 무력시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우발적 무력 충돌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전쟁 위기마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이 채택한 '핵 무력 정책'의 법령은 이러한 군사적 위기를 기능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새로운 법령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핵 선제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더 강력한 '확장 억제'를 추진하였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 자체를 '안보를 위한 미국의 확실한 약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 핵 공격 시 미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약속은 우리의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핵무기가 한번 사용되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면서 더 강력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힘의 대결은 날로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예방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면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멀고 험한 여정일지라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기”(2코린 5,18)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모범처럼,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신뢰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첨단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2월 24일, 이날을 ‘슬픈 기념일’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3.2.22. 참조).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였는지 돌아보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특히 “진정한 승리는 폐허 속에서 세워질 수 없다.” 하시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 협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7월 27일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는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미사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2023년 6월 2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 주 영 주교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2023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제 1 판 1쇄 발행 2023년 11월 27일
발행인 이기헌 주교
편집인 강주석 신부(소장)
발행처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전 화 031-850-1502
팩 스 031-850-1581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에 있습니다.